

'대한민국 100년' 연속기획 2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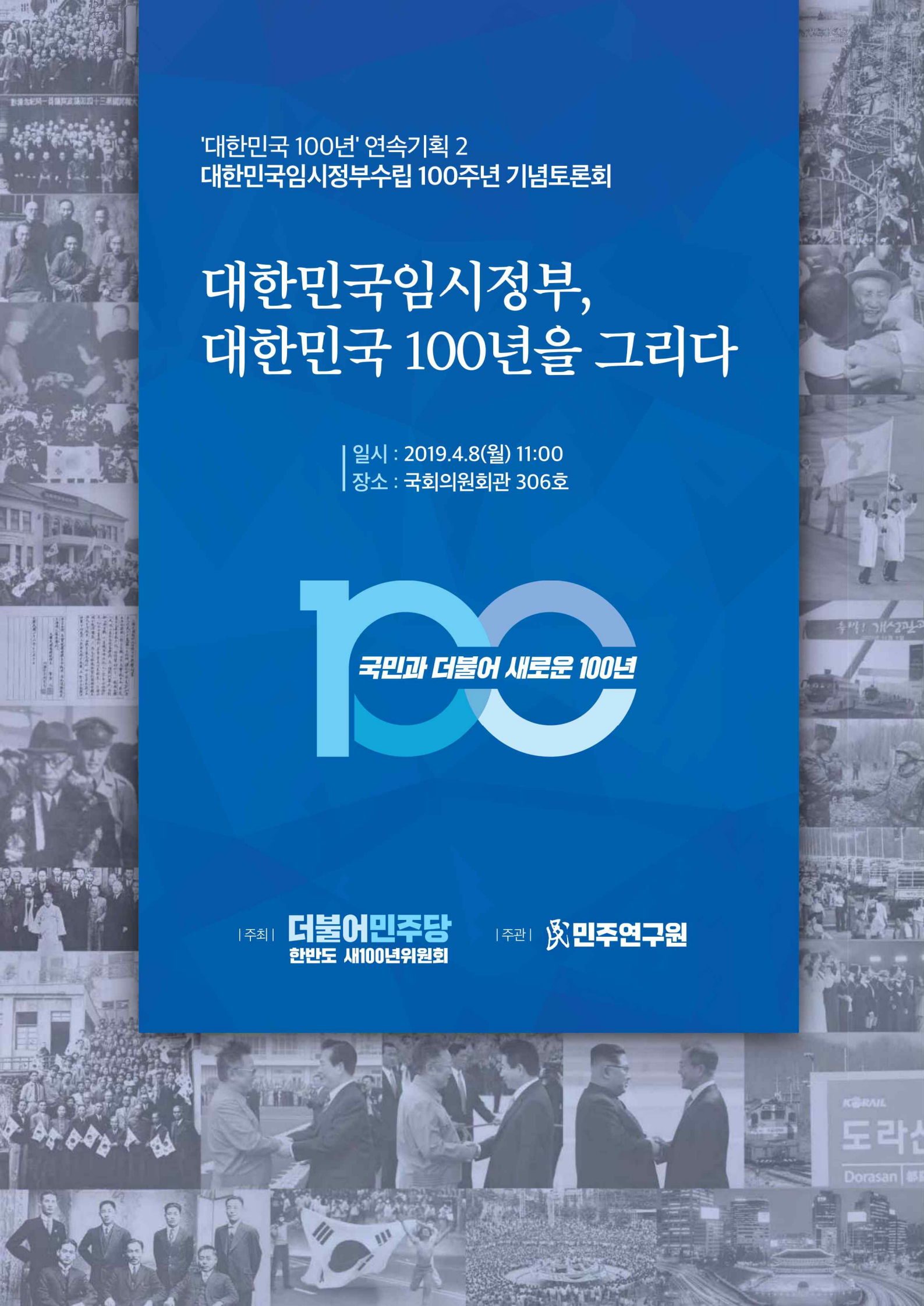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100년을 그리다

| 일시 : 2019.4.8(월) 11: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 주관 | **민족민주연구원**



인사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반도 새100년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올 해 이 땅에 새로운 100년이 시작됩니다. 지난 100년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분단이라는 고통을 차례로 겪으면서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로 확립되어왔고, 경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하며 거치며 인구 5천만 명이 GNI 3만 달러를 동시에 달성한 '3050클럽'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한층 성숙된 민주주의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항구적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의 시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입니다. 오욕의 일제 강점 하에서도 치열한 항일 독립운동과 광복의 토대가 되어 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과정과 역사, 지향하는 가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통해 균형을 이룹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조망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100년의 시작인 임시정부 수립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100년 전 그날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한반도의 번영과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해 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새100년위원회 미래비전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 원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100년을 그리다」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 행사를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새100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의 기초연설을 맡아 주신 정근식 교수님, 발제를 해 주신 한시준 교수님, 이현환교수님, 배영대 소장님과 토론을 맡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선조들은 일제식민지배에 맞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건설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꿈은 자주적 독립, 자유, 평등, 인류애, 평화, 통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꿈은 지난 100년 산업화, 민주화의 거대한 뿌리였습니다. 이제 그 꿈은 새로운 100년,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평화국가, 온 민족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신한반도체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광복을 우리 손으로 이루지 못했던 순간, 친일청산을 이루지 못한 반민특위의 좌절,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 냉전체제의 지속으로 생겨 난 대립과 갈등. 역사의 빈 자리는 후대들이 채워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 위원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워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새100년위원회 미래비전본부 본부장

민주연구원 원장 김 민 석

Contents

■ 기초연설

대한민국 100년: 민주공화국, 남북평화체제, 그리고 탈식민 프로젝트	1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제

[발제 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13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발제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	29
이헌환 (아주대 교수)	
[발제 3]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과	43
배영대 (중앙일보 근현대사연구소장)	

■ 토론

[토론 1]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65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토론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 - 임시헌장과 헌법 등에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비전”에 대한 토론문	69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토론 3]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성과”에 대한 토론문	75
김종욱 (동국대 SSK 패치워크문명연구팀 연구교수)	



기조 연설

대한민국 100년: 민주공화국, 남북평화체제, 그리고 탈식민 프로젝트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한민국 100년: 민주공화국, 남북평화체제, 그리고 탈식민 프로젝트¹⁾

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 3·1절 100주년이라는 시간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전민족적인 3·1독립운동과 그 열매로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정부 헌장 1조의 민주공화제”를 강조하는 기념사를 하였다. 3·1절 기념사답게 ‘친일잔재 청산’도 강조했는데, 특히 변형된 ‘색깔론’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로 규정하였다. 또한 역사적인 평양연설을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강조하고,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혁신적 포용국가, 한반도 경제협력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아마도 대통령은 2018년 9월에 이루어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의 3·1절 공동행사 합의라는 성과²⁾와 2019년 2월말에 하노이에서 이루어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담아 3·1절 기념행사를 준비하다가, 공교롭게도 3·1절 바로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이 회담이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끝났기 때문에, 결국 남북공동행사를 치루지 못하고, 기념사의 내용도 상당히 바꾸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보수야당 정치인들의 5.18 왜곡이나 반민특위 폄훼 발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기념사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하는 느낌을 주었다.

이 기념사에서 필자의 관심은 새롭게 피력한 통일관에 비추어 남북한의 서로 다른 역사인식, 특히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다. 비핵화협상이 약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지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나아가 좁혀 갈 것인가라는 난제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후반부터 최근까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가 많이 열렸고, 앞으로도 더

1) 민주연구원에서 원래 의뢰한 제목은 “대한민국 100년, 반민특위와 친일청산의 의의”였지만, 이를 약간 바꾸었음.

2) 2018년 9월 19일에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행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열릴 것이다. 이 회의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평화, 민주주의, 공화주의라는 프레임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3월 말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이 열렸는데, 필자는 이 행사의 부제인 '3.1운동에서 촛불혁명으로, 임정수립에서 통일 한반도로'라는 표현에 흥미를 가졌다. 이 부제는 1919년과 2019년,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100년이 역사적 시간으로서의 한 세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무의식적 희망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포럼에서 한완상 기념사업위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이 비폭력 평화라는 3.1운동의 가치를 계승했다는 것, 3.1운동이 모든 폭력 패권주의로부터의 해방과 세계평화주의를 지향했다는 것, 3.1운동의 배경에 레닌과 월슨의 세계전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포럼에서 많은 발표자들이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3.1운동의 배경으로서의 파리강화회의(정병준)와 민주주의 노선(김정인), 3.1운동의 국제적 맥락과 중국 5.4운동과의 연동(백영서), 3.1운동의 계승으로서의 임시정부(한시준)와 제헌헌법(송석윤), 냉전-분단으로 인한 민주공화정의 굴절(김동춘), 세계시민적 이상과 괴리된 현실(박명림), 한반도 평화비핵화 프로세스(고유환)와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이종원) 등에 관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난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2.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기억 그리고 평가의 역사

한국사회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69년 동아일보사가 주관하여 발간한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1989년 70주년을 맞아 한국역사연구회와 역사문제연구소가 발간한 기념논문집, 2009년 90주년을 계기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3.1운동과 임시정부에 관한 논의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에 대한 평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논쟁을 수반하였다. 올해 100주년에 강조되고 있는 의제는 주로 평화와 민주공화제에 관한 것인데, 이는 2016-17년에 경험한 촛불혁명의 기억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19년 3.1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다. 각 지방의 대표자들 29인은 4월 10일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고, 4월 11일 10개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발표하였다. 전문에서는 3.1운동을 계승했다고 밝히고, 제1조 민주공화제 채택, 제2조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제3조 특권계급 부인 등을 밝혔다. 이 해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는 8장 58조의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하였는데, 전문에서 3.1운동 계승을 분명히 하고, 제1장 총령에서 국가구성의 3요소인 국민, 주권재민, 국토를 규정하였고, 3권 분립의 원칙과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얼마 되지 않아

출신 지역과 민족주의/사회주의라는 이념에 따른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1923년 신채호의 주도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서는 임시정부를 해체하자는 입장과 3·1운동에 근거한 임시정부를 개조하자는 입장으로 분열되었고, 1925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이후 국권 회복투쟁의 방식을 둘러싸고 분열이 계속되었다. 1935년 7월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할 때 임시정부 해체론이 또 다시 등장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 고수파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했고 반임정세력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했다(윤대원, 2009). 1939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주선으로 이들은 통합을 논의했지만, 실패하였다.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이전한 후,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군제도에 기초하여 민주국가의 건설을 위한 22개조의 건국강령을 발표하였고, 12월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다. 3·1운동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는 임시정부 법통성 강화 논리는 임시의정원이 1944년 4월에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전문에도 들어가 있다. 김정인(2018)에 따르면, 임시정부는 출범 이래 해체론이 제기될 때마다 3·1운동에 근거한 임시정부 법통성을 내세웠고,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우파 정치세력을 묶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1945년 8월의 광복은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분할점령과 함께 왔다. 건준을 주도한 여운형은 미군 진주를 앞두고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는데, 맥아더사령부는 9월 7일, 포고 제 1호를 통해 군정을 선포하였다. 9월 9일 창당된 한국민주당은 ‘임정봉대’를 주장했다. 이것은 인민공화국을 전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미군정이 인민공화국 뿐 아니라 임시정부를 과도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한민당은 임정봉대론을 폐기했다. 임정 요인들은 1945년 11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 세력은 임시정부를 근간으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임정 법통성을 고수했다.

해방 후 처음 맞은 1946년 3·1운동 기념식은 1919년으로부터 불과 27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기념식은 분열되어 치루어졌다. 우익 중심의 ‘기미독립선언기념 전국대회준비위원회’는 서울운동장에서, 좌익 중심의 ‘3·1기념 전국준비위원회’는 남산공원에서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박명수(2016)는 이를 광복 최초의 역사논쟁으로 불렀다. 이런 차이는 1947년 3·1운동 기념식에서의 유혈 충돌을 낳았다.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은 3·1운동을 ‘자연발생적 대중운동’,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학생·급진적 소시민 등 인민대중이 주도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공산당 지도자였던 박헌영은 1947년에 쓴 글에서 3·1운동의 성격을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주의적 해방운동”으로 규정하면서, 전위조직의 부재와 토지개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3·1운동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성은 부정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임정법통성은 ‘해방 3년’의 정국에서 우파의 전유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필요에

따라 수용하거나 혹은 폐기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였다(김정인, 2018). 그러나 남북에 분단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정 법통성은 권력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논리로 기능했다. 1948년 7월의 제헌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섰은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했다. 임정법통성을 고수하던 김구가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은 임정법통성에 기초했다. 이런 모순적 상황이 1919년 4월 서울에서 탄생한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주장하는 이승만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박정희 군사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1963년의 헌법은 임시정부 법통성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 ‘3·1정신’은 독재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구국의 정신으로 표상되기도 하였다. 유신정권의 탄압이 정점에 달했던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반독재민주화를 위한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 때 3·1정신은 민주화를 위한 구국의 정신으로 표상되었다(이지원, 2018).

임정 법통성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다시 헌법 전문에 들어갔다. 이는 민주화의 성과이지만,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고조된 분단체제의 경쟁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민주화와 ‘변혁’의식의 고양이라는 국면에서 임정법통성에 대한 논의의 제기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민중사학’을 표방한 일부 역사학자들은 3·1운동이 임시정부 수립보다는 민중이라는 역사적 주체의 부상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임시정부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위에 수립된 역사적 진보성은 인정하나, 전체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한 영도기관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정인, 2006).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구분하려는 시각이었다.

2008년부터 제기된 건국절 논쟁은 역사학계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화하도록 고무한 효과가 있다. 한시준은 건국절 논쟁이 일어난 2008년에 제헌헌법 전문을 근거로 하여 1919년에는 임시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고 1948년에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임시정부에 대해 저평가했던 민중사학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수정주의가 부상하자 역으로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하나로 묶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서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임시정부’의 탄생에 주목하는 흐름이 부상했고, 바로 이 접점을 기반으로 임정법통성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학자들이 건국절 논쟁에서 같은 편에 설 수 있었다(김정인, 2018). 최근의 촛불시민혁명도 3·1운동 및 임시정부의 3·1운동 계승론을 강화시켰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공화국 및 국민주권이라는 이념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냉전분단체제하에서 북한은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 남북 역사학자들은 이에 관한 충분한 토론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들의 정확한 인식을 알 수 없지만, 홍종욱(2018)은 북한에서 편찬된 중요한 역사서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략적 답을 제시하였

다. 이에 따르면, 3.1운동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1949년 최창익과 김승화에 의해 쓰여졌다.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최창익과 김승화가 숙청된 후 북한 역사학계는 3.1운동에 대해 다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리나영이 중심이 되어 1958년에 출간된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3.1운동에 관한 서술을 축소시켰다. 아울러 1919년 3월 1일의 평양의 3·1 운동과 3월 5일 시위에서 ‘붉은 깃발’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는 1959년에 <3·1 운동 40주년 기념 논문집>을 엮고 1960년에는 3·1 운동자료집도 발간하였다. 이는 북한이 1950년대에 남한에 비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1년에는 ‘과학원 력사연구소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이 편한 <조선근대혁명운동사>가 간행되었다. 이 책에서 3·1운동은 전석담이 집필하였다.

북한은 1979년에서 1983년에 걸쳐 총 33권의 조선전사를 간행하였는데, 3·1운동은 제15권에 있다. ‘3·1 인민 봉기’를 ‘거족적인 반일항쟁 기운의 성숙’으로 보고, 노동자, 농민의 투쟁에 주목하였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적 독립운동준비사업’에 대해서도 2·8독립선언을 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하였다. 홍종욱(2018)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에 대한 언급이 없어진 것을 가장 큰 변화로 보았다. 이것은 3·1운동의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판단하였다. 또 하나의 변화는 평양의 만세시위를 3·1운동의 ‘첫 봉화’(120쪽)로 규정한 점이다. 평양의 3·1운동을 김형직의 활동의 성과로 규정하였고, 3월 3일 만경대 시위에 김일성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홍종욱(2018)은 역사서술에서의 ‘신화’를 벗겨내면, 남북한 역사학의 “공통의 화두는 민중과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자주’와 함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3. 민주공화국을 위한 탈식민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

3.1 독립선언서에서 표현된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 그리고 “인류평등과 민족자존”의 문제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사회가 성취한 ‘친일 청산’ 또는 탈식민 프로젝트의 성과와 한계를 토론하지 않을 수 없다.

1945년 광복이후 우리가 정상적인 탈식민 민족국가 형성의 길을 걸었더라면,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을 척결하고,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분할점령과 군정은 남북한에서 탈식민 프로젝트의 양상을 다르게 했을 뿐 아니라 남한에서의 탈식민 프로젝트를 지연시켰다. 미군정은 일본에서와는 달리 남한에서 기존의 통치엘리트층을 중용하면서 국가형성을 추진하였다. 미군정 3년간 탈식민 프로젝트는 추진되지 않았고, 임시정부 세력이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은 배제되었다.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설립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는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305명을 체포하고, 61명에게 자수를 받았으며, 55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된 극단적 우경화는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의 비호 하에 친일 경력의 경찰은 1949년 6월 반민특위 산하의 특별경찰대를 강제 해산하였다. 반민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탈식민 프로젝트는 실패하였다. 한국전쟁은 남한에서의 탈식민 프로젝트가 오랫동안 소생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1960년대 이후 친일파 청산이라는 의제는 민주화운동을 구성하는 역사적 정치적 자원으로 작동하였다. 한국사회에서는 반민특위가 실패함으로써 친일파 청산이 좌절되었고, 이에 반해 북한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상대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되어갔다.³⁾

제도적인 친일파 청산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능해졌다. 한국사회는 1987년 6월항쟁이후 탈독재(탈권위주의), 탈식민, 탈냉전이라는 3중적 이행을 경험하였다. 시간적으로는 탈식민 프로젝트가 선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야 비로소 제한된 범위에서의 탈식민 프로젝트가 가능했고, 전쟁유산을 극복하는 프로젝트는 미약하게 진행되었다. 다시 시작된 탈식민 프로젝트의 출발은 1991년 2월에 이루어진 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격적인 탈식민 프로젝트는 1995년 ‘광주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에 기초한 5.18문제의 잠정적 해결을 다짐들로 하고 있다. 1999년말에 제정된 4.3 특별법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화해가 진전되면서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을 극복하고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 고조되었다. 2001년 12월부터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에 기초하여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의 탈식민 프로젝트는 반민특위의 좌절을 교훈삼아 광복 60년이 지나서 제도화된 셈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한국의 탈식민 프로젝트는 세 가지 동심원을 그리면서 진행되었다. 중심적인 것은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이었고, 이것보다 외연이 넓은 것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주도한 친일인명사전 편찬사업이었으며, 가장 강도가 센 것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의 활동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05년 5월에 발족하였으며, 일제강점기를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해방)로 나누어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하고, 제1기 106명, 제2기 195명, 제3기 705명, 총 1,006명을 확정하였다.

친일인명사전의 경우, 민족문제연구소는 2만5천 건의 친일혐의자 모집단에서 엄밀한 심의를 거쳐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인원은 4,776명이었다. 여기에서

3) 북한에서의 친일파 청산과 사회혁명이 남한에서의 사회적 갈등, 나아가 남북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점은 한반도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비극이다.

는 친일파를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로 구분했고, 선별의 원칙은 자발성과 적극성, 반복성, 중복성, 지속성 여부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했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1,113만 9,645m²)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다.

이런 3원적 탈식민 프로젝트의 정치적 효과, 특히 국민적 통합을 제고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 우선 이 프로젝트들에 대하여 많은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사람의 후손들의 저항은, 민사·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친일파 후손 간 법적 공방이 가열되던 2011년 3월,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들이 이에 대해 충분히 승복했다는 증거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는 달리 이런 탈식민 프로젝트들이 ‘미완의 청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친일 청산이라는 과제는 일상적인 제도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런 반발은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정치의 보수화에 따라 재생산되었다.

한국에서 탈식민 프로젝트는 정부주도의 독립유공자 보훈사업과 시민사회 주도의 ‘친일파 청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독립유공자 보훈사업은 1945년 이후의 남북분단이 영향을 강하게 미쳐 독립유공자라 하더라도 북한 정부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배제되어왔기 때문에 남북평화변영의 시대에는 이를 재조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친일파 청산’이라는 과제가 탈식민 프로젝트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탈식민이라는 과제를 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친일파 청산론은 과도하게 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왜 우리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야 하는가. 박명규(2018)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감각을 구성하려는 현재적 노력이다. 미래를 전망하는 시선과 과거를 해석하는 지식을 결합하여 현재를 입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확보하려는 지적 기획”이라고 보았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오늘날 3.1운동을 기억하고 임시정부를 거론하는 이유는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을 통해 한국의 현대사를 다시 성찰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100년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인식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지배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이고 미래를 선취하기 위한 전망대였다. 3.1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에 작용하는 중요한 국내적 변수의 하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망각이다. 요즘의 대학생들이나 젊은 시민들은 100년전의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드라마나 영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역사상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3.1운동 100주년 기념에 임하는 많은 연구자들

은 건국절 논쟁으로 대표되는 역사수정주의와 태극기-성조기부대의 역사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올해 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5.18 폄훼와 왜곡, 반민특위에 대한 야당대표의 폄훼 등은 1990년대 중반이후 2010년까지 우리가 성취한 이행기 정치의 기반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치의 우경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 정치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장집교수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동아시아의 정치현실과 한국현대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도한 민족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남북간의 대화와 평화를 위한 장기적 전망에서 민족주의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변영이라는 미래를 구상하면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2017년 고조된 북한 핵위기와 2018년의 극적인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였고, 상호이해와 인정이 평화를 낳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실감하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3.1운동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3.1운동 100주년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역사적 인식의 괴리를 메우고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겪으면서, 우리는 근현대 한국의 역사를 성찰하게 된 측면이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내비친 남한의 발전모델에 대한 그의 생각으로부터 간취되는 한국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냉전발전론적 패러다임은 기존의 국내 중심적 패러다임과 다른 것이고, 남북한의 시각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도전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중심의 현대사를 한반도 중심의 현대사로 다시 성찰하도록 하고, 지구사적 시각에서 우리를 돌아보도록 한다. 우리의 존재의 기반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이지만, 동시에 남북평화변영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 중심주의를 상대화해야 한다는 모순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주의를 넘어 지방주의와 민족주의를 포용해야 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세계 시민주의를 향해 열린 사고를 발전시켜야 한다.

최근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구상이 크게 달라서 교착 상태에 있고,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여부조차 남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답답함이 있지만, 탈냉전과 탈분단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후의 한반도의 질서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적대’를 ‘차이’로 완화시키고, 차이의 인정을 통한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현실정치와 국제적 정치환경을 생각하면 매우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청산’이나 ‘통일’이라는 개념이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있어서 적실한 것인지 숙고해야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100년전의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사상과 유산을 다시 찾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기초로 공동체적 합의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지 차이를 배제하고 청산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참고문헌

- 강정인·한유동, 2014, 「이승만대통령의 국가기념일 활용에 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7-1.
- 김정인, 2006, 「민족해방투쟁을 가늠하는 두 잣대: 독립운동사와 민족해방운동사」, 역사와현실 62.
- 김정인, 2009, 「기억의 탄생: 민중 시위 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현실 74호.
- 김정인, 2018,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 서울과 역사 99호.
- 류시현, 2009, 「1920년대 삼일운동에 관한 기억-시간, 장소 그리고 ‘민족·민중」, 역사와현실 74호.
- 박명규, 2018,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 31운동의 “지나간 미래”, 한국사회사학회 심포지움: 〈3.1 운동과 평화〉 발표문.
- 박명수, 2016, 「1946년 3·1절 - 해방 후 최초의 역사논쟁」,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8-1.
- 박명수, 2017, 「1947년 3·1절에 나타난 임정법통론과 인민혁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9-1.
- 박종린, 2018, 해방 직후 사회주의자들의 3·1운동 인식, 서울과 역사 99.
- 박현호·류준필 편, 2009,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윤대원, 2009,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110.
- 윤해동, 1989, 「3·1운동과 그 전후의 부르조아민족운동」, 정용욱 외, 남북한 역사인식비교강의 (근현대편), 일송정.
- 이노미(박현영), 1947, 三一運動의 意義와 그 敎訓, 이정 박현영전집, 역사비평사(2004).
- 이지원, 2018, 역대 한국 정부의 3·1절 기념사를 통해 본 3·1운동의 표상과 전유, 서울과 역사 99호.
- 임종명, 2009, 「脫식민시기(1945.8~1948.7) 남한에서의 3·1의 소환과 표상」, 대동문화연구 66.
- 임종명, 2009,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전용·전유」, 역사문제연구 22.
- 임종명, 2010, 「설립 초기 대한민국의 3·1절과 국민생산」, 역사학연구 38.
- 정근식, 1995, "집단적 역사경험과 그 재생의 지평,"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47, 문학과 지성사.

- 정상우, 2009, 「3·1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견」, 역사와현실 74호.
- 정종현, 2007, 「3·1운동 표상의 문화정치학 - 해방기~대한민국 건국기의 3·1운동 표상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3.
- 최병택, 2009, 「해방 후 역사교과서의 3·1운동 관련 서술 경향」, 역사와현실 74호.
- 최은진, 2017,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의례와 3·1운동 표상화(1949~1987)」, 사학연구 128.
-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1989,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 홍종욱, 2018, 북한 역사학의 3·1운동 인식 - 주요 통사류의 관련 서술 분석 -, 서울과 역사 99호.



발제 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

한시준 (단국대 역사학과 교수)

〈차례〉

1. 머리말
2.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1) 수립 배경
 - 2)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수립
 - 3) 세 임시정부의 통합
 -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
3.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자는 이승만의 제안
 - 2) 제헌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계승 재건을 천명
 - 3) 임시정부와 동일한 연호 사용
4. 맺음말

1. 머리말

우리 민족은 반만년 가까운 역사를 유지해오면서 많은 국가를 세웠다. 세운 나라가 망하면 또다시 국가를 세우고, 그러면서 역사를 유지해 온 것이다. 국가를 세울 때마다 국가의 이름이 달랐다. 고조선 → 부여 → 고구려·백제·신라 → 고려 →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건설한 것은 두 번이었다. 하나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다른 하나는 1948년 8월 15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언제 수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1919년으로 보아야 하느냐? 1948년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과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이 어떠한 관계인가를 밝히면 된다. 그 방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검토하면 될 것이다.

이 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1948년

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짓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언급하려고 한다.

2.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 수립 배경 : 대한제국의 멸망, 그리고 독립선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가장 큰 배경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은 1897년 ‘조선’이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고, ‘왕’을 ‘황제’로 칭하면서 성립된 국가였다. ‘조선’이란 국가를 이어 성립된 것이 ‘대한제국’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1910년 8월 29일 멸망하였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이를 이어 다시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1919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우리 민족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최대과제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독립운동이었고, 민족구성원 대다수가 국내를 비롯하여 만주·연해주·중국대륙·미주지역 등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독립운동에는 목표가 있었다.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당면한 과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국외 각 지역에 이주해 있는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국외 각지역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은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묶어 자치기구를 설립하였다. 서간도지역의 한족회, 연해주지역의 전로한족회중앙총회,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자치기구는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하나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구역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독립운동 기구로서의 역할이었다. 이 중 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은 사실상 정부와 같은 것이었다.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주지역의 대한인국민회이다. 대한인국민회는 1910년 미주지역 한인들의 자치기구로 설립되어 미주지역 한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를 ‘무형국가’로 건설하자는 논의도 있었다.⁴⁾

자치기구를 설립한 것과 더불어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시도는 고종을 국외로 모셔가려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유인석을 도총재로 한 13도의 군을 결성하고, 고종에게 연해주로 파천하여 독립운동을 이끌 것을 권유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그

4) 김도훈,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한국근현대사연구》10집, 1999, 259쪽.

러한 시도였다.⁵⁾ 이러한 시도는 한 차례 더 있었다. 1915년 중국에서 활동하던 박은식·이상설 등이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고종을 중국으로 모셔가려고 한 것이다.⁶⁾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성사되지 못하였지만, 고종을 국외로 모셔다가 ‘망명정부’를 세우려는 의도였다.

국외 각지역에서 자치기구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이 이보다 더 발전된 형태, 즉 한민족의 대표기구를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1917년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던 신규식·조소앙·박은식 등이 ‘대동단결선언’을 통해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전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최고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의한 것이다. ‘유일무이한 최고기관’이란 민족의 대표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지점에 중앙본부를 두고 이로 하여금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민족을 통치하자’고 하면서, 중앙본부는 헌법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운영하자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임시정부’ 수립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

국가없이 국내외 각지로 흩어져 활동하던 한민족이 국가를 수립하게 되었다. 직접적 계기는 독립선언이었다. 1919년에 들어서면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은 독립에 대해 커다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전후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강화회의가 개최되자, 이를 조국독립의 주요한 기회로 여긴 것이다. 상해를 비롯하여 연해주·미주·국내 등 국내외 각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자들이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것과 더불어 국내외 독립운동자들이 추진한 것이 또하나 있었다. 독립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이다.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국내외 각지에서 독립선언이 연달아 발표되었다. 3월 1일 국내의 인사들이 독립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 만주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이, 그리고 3월 13일에는 북간도 용정에서, 3월 17일에는 연해주에서, 4월 16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독립선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는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고, 둘째는 한민족은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것이다. 1919년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은 지 9년째 되는 해였다. 그렇지만 한민족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독립국임을 선언한 것이 독립선언이었다. 3월 1일 국내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에 “오등은 자에 아조선의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으니, ‘독립국’을 세워야 했다. 만일 ‘독립국’을 선언하고 독립국을 세우지 않았다면, 독립선언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독립선언을 통해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5) 윤병석, 『증보 이상설전』, 일조각, 1998, 130쪽.

6) 강영심, 「신한혁명당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2집, 1988, 128 - 129쪽.

7) 조동걸,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 《한국학논총》9집, 131쪽.

2)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수립

독립을 선언한 후, 국내외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중심지는 중국 상해였다. 상해는 대한제국 군인 출신인 신규식이 망명하여 중국의 혁명당 인사들과 교류를 맺으며, 1910년대부터 중요한 국외의 독립운동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그리고 1917년 이곳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민족의 대표기구를 수립하자고 제안한 곳이기도 하였고, 산한청년당이 결성되어 국내외 각지에 연락을 취하여 상해로 오도록 하였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독립을 선언한 직후 상해로 모여들었다. 연해주에서 이동녕·조완구, 만주에서 조소앙·이시영·김동삼, 북경에서 조성환·이회영, 일본에서 이광수·최근우, 국내에서 현순·최창식·신익희, 미국에서 여운홍 등 많은 인사들이 상해로 집결하였다.⁸⁾ 3월말에 이르면 그 숫자가 1천여명을 헤아릴 정도가 되었다. 이들이 상해로 모여든 이유는 독립선언을 통해 천명한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상해에 모인 인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현순·손정도·신익희·조소앙·이동녕 등 29명이 대표가 되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한 일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조소앙이 모임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 하자고 하여 가결되었고, 이동녕과 손정도를 각각 의장과 부의장, 이광수와 백남철을 서기로 선출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다. 임시의정원은 현재 국회와 같은 것이다.

임시의정원을 설립한 후, 곧바로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정원 회의는 의장으로 선출된 이동녕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국호, 관제, 국무원 선출, 헌법제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국호였다. 국호는 신석우가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제의하여 그대로 가결되었다.⁹⁾ 이로써 한국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 이름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논의한 것은 관제(官制)였다. 관제는 국가를 유지 운영하는 정부의 조직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수반의 명칭은 무엇으로 하고, 행정부서는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관제에 대한 논의는 행정수반의 명칭은 국무총리로 하고, 행정부서는 내무·외무·법무·재무·군무·교통 등 6개 부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세 번째로 국무원을 선출하였다. 국무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6개 행정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국무원의 선출은 무기명 단기식 투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국무원을 선출하였다.

국무총리 : 이승만

내무총장 : 안창호, 내무차장 : 신익희

8) 김희곤, 『대한민국임시정부연구』, 지식산업사, 2004, 87쪽.

9)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2005, 19 - 26쪽).

외무총장 : 김규식, 외무차장 : 현순
 법무총장 : 이시영, 법무차장 : 남형우
 재무총장 : 최재형, 재무차장 : 이춘숙
 군무총장 : 이동휘, 군무차장 : 조성환
 교통총장 : 문창범, 교통차장 : 선우혁
 국무원비서장 : 조소앙

네 번째로 헌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헌법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익희·이광수·조소앙 3인을 선정하여 초안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수정을 거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제1조)을 비롯하여 10개조로 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헌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로써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임시정부,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이를 유지 운영하는 정부를 일컫는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역사에서 또하나의 국가가 세워졌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수립한 것이다.

3) 세 임시정부의 통합

독립을 선언한 후, 상해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립된 임시정부 중에는 수립한 주체와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단으로만 알려진 경우도 있다. 실제적인 인적기반과 조직을 갖춘 정부는 세 곳이었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가 그것이었다.

세 곳의 임시정부는 지역적 기반도 달랐고, 인적 기반도 같지 않았다. 교통이 불편하고 서로 연락이 어려운 가운데, 각각의 지역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세 임시정부가 모두 민족의 대표기구로 역할할 수는 없었다. 통합문제는 연해주측에서 먼저 제기하였다. 대한국민의회 상설의회 의장인 원세훈이 상해로 와 노령에도 국민의회가 있으니 의정원을 합하고 정부를 노령으로 옮기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상해에는 이 문제를 주도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국무총리 이승만을 비롯하여 각원들 대부분이 아직 취임하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총장 이시영만 상해에 있었다.

통합문제는 내무총장 안창호가 부임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었다. 안창호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내무총장에 선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미국을 출발하여 상해에 도착, 내무총장으로 집무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무총리 이승만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대리도 맡았다.

안창호는 통합을 추진하였다. 그는 통합방안으로 ‘삼두체제’를 제기하였다. ‘삼두체제’는 집권자를 3명으로 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집단지도체제였다. 그 방안은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의 7총장은 그대로 두고, 7총장 위에 집권자 3명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집권자 3명은 상해에서 성립한 임시의정원 의원과 더불어 연해주·중국지역·미주지역에서 정식으로 의정원 의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의정원에서 뽑자고 하였다.¹⁰⁾

그러나 ‘삼두체제’는 통합방안으로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상해의 임시정부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사이에 정부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견제도 작용하였지만, 이승만이 한성정부를 배경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승만은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이고, 한성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였다. 그러나 그는 임시정부의 명칭을 영어로 ‘Republic of Korea’라 호칭하고, 집정관총재를 ‘대통령(President)’으로 번역하여 대외적 명칭으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과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내외에 알리며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었다.¹¹⁾

안창호는 ‘삼두체제’로 통합을 이룬다는 방안을 접었다. 그리고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세 임시정부를 통합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안창호는 8월 28일 임시의정원 회의에 출석하여 이승만이 한성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한성정부를 중심으로 통합을 이루자며 의원들을 설득하였다.¹²⁾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측과도 협상을 벌였다. 이를 위해 내무차장 현순과 김성겸을 연해주에 파견하여 상해와 연해주에서 수립한 임시정부는 모두 없애고, 국내에서 수립한 한성정부를 계승하는 형식으로 통합을 이루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핵심은 정부의 위치는 상해에 둘 것, 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로 할 것, 그리고 상해와 연해주의 각원은 모두 사퇴하고, 한성정부에서 선출한 각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각원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었다.¹³⁾ 대한국민의회측은 이 방안에 찬성하였다.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었다.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은 국무총리를 행정수반으로 하고 있었다. 행정수반을 대통령으로 하면서, 이를 개정하여야 했다. 그리고 정부의 각원도 한성정부의 각원으로 바꾸면서, 정부도 개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의회가 소집되었고, 1919년 8월 18일부터 제6회 임시의정원

10) 한시준, 「도산 안창호와 대한민국임시정부」, 《도산학연구》13집, 2010, 202쪽.

11)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연세대 출판부, 2004, 79쪽.

12) 《독립신문》 1919년 9월 2일자. 「臨時憲法改訂案 臨時政府改進黨案」.

13) 반병률, 「대한국민의회와 상해임시정부의 통합정부 수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2집, 1988, 105 - 106쪽.

회의가 열렸다. 안창호는 임시의정원에 ‘임시헌법개정안’과 ‘임시정부개조안’을 제출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9월 6일 전문을 비롯하여 모두 8장 58개조로 된 ‘대한민국임시헌법’이 통과되었다.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정부를 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¹⁴⁾ 각원의 선출은 한성정부의 각원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집정관총재의 명칭만 대통령으로 바꾸었다.

대통령 : 이승만, 국무총리 : 이동휘

내무총장 : 이동녕, 외무총장 : 박용만, 군무총장 : 노백린

재무총장 : 이시영, 법무총장 : 신규식, 학무총장 : 김규식

교통총장 : 문창범, 노동국총판 : 안창호¹⁵⁾

이로써 연해주·상해·국내에서 수립된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어 새로이 정부를 구성하였다. 통합정부는 1919년 9월 11일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통합정부의 명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가 되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진 국가를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은 국가였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이를 이어 세운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국호도 대한제국의 국호인 ‘대한’을 그대로 계승하였고, ‘제국’을 ‘민국’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이라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우리 민족 역사가 대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란 한 것이 그것이다.¹⁶⁾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 정부로 수립되면서,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민족의 역사에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전제군주제의 역사에서 민주공화제의 역사로, 군주주권의 역사에서 국민주권의 역사로 바뀐 것이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가와 정부로 역할하면서,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켰다. 임시정부는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

14) <임시의정원기사록 제6회>(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2005, 81쪽).

15) <독립신문> 1919년 9월 16일자. 「신내각성립」.

16) <대한민국임시헌장>(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 2005, 3쪽).

함”이라 한 데 따라, 임시의정원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국회와 같은 것이다. 임시의정원은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의원은 각 지역의 대표로 인구 30만명에 1인을 선출하였다.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도 임시의정원법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임시의정원법은 현재 국회의 국회법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임시의정원은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안의 제안, 예산 및 결산 의결, 국무원·대사·공사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포고 및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청원수리,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의원들은 내무·외무 등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심지어는 경위까지 두었다.¹⁷⁾ 지금의 국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지도체제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켰다. 수립 당시에는 국무총리가 행정수반이었다. 그러나 1919년 9월 세 임시정부가 통합을 이루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중심제로 하였고,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을 선출하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과 상해에 있는 국무위원들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임시정부가 파국을 겪게 되자, 임시의정원에서 1925년 3월 대통령을 탄핵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한 후,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바꾸었다. ‘대통령’이란 명칭을 ‘국무령’으로 바꾼 것이다. 이후 1927년 다시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회제를 채택하였고, 1940년 다시 단일지도체제인 주석제로 바꾸었다. 그리고 1944년 좌우연합정부가 수립되면서, 주석·부주석제로 변경하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지도체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에 민주공화제를 정착시키고 발전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수립 당시부터 국호인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하여,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 1920년은 ‘대한민국 2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연호는 자주독립국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주국가로 유지 운영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

1)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자는 이승만의 제안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은 제헌국회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5·10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고, 5월 31일 개원하였다.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한 후,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여 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선포한 것이다.¹⁸⁾

17)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2, 2005, 3 - 18쪽).

제헌국회에서 정부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은 개원식에서 제기되었다.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승만이였다. 이승만은 제헌국회 개원과 더불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국회의장으로 국회를 개원하는 개회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수립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우리는 민족의 공선(公選)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職務)와 권위(權位)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大韓獨立民主政府)를 재건설(再建設)하려는 것입니다.
- 이 민국(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의 임시정부의 계승(繼承)에서 이날이 29년만에 민국의 부활일(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연호(民國年號)는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요.¹⁹⁾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국을 재건설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재건설하고자 하는 민국은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우리가 건설할 정부는 1919년 서울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29년만에 민국을 부활하는 것이고, 연호는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그 시점은 1919년부터 계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재건·부활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이 언급한 임시정부는 서울에서 수립한 ‘한성정부’였다. ‘한성정부’는 홍진·이규갑 등의 주도하에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하여 수립한 임시정부로, 1919년 4월 23일 국민대회 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후 한성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해와 연해주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와 통합을 이루었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이승만이 제시한 방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국호의 결정을 들 수 있다. 국호문제가 제기되자 이승만은 “3·1운동에 의해 수립된 임시정부의 국호대로 대한민국으로 정하기로 하고”라 하여,²⁰⁾ 임시정부의 국호인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하자고 하였다. 이는 제헌국회에서 그대로 가결되었다. 7월 1일 제28차 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63표, 반대 2표로 ‘대한민국’을 국호로 결정한 것이다.²¹⁾

18)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현음사, 2001, 515 - 534쪽.

19) 「國會開院式 開會辭」(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雲南李承晩文書』東文篇 15, 1998, 90 - 92쪽).

20)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일조각, 2013, 241쪽.

21) 대한민국국회, 『제헌국회속기록』 1987, 349쪽.

2) 제헌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계승 재건을 천명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립되었다. 그리고 제헌헌법에서는 그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혀 놓았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繼承)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再建)함에 있어서 (후략)²²⁾

이는 제헌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혀 놓은 것이다. 내용은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를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 것이라고 했다.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컫는 것이고,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이라고 한 민주독립국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말하는 것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19년에 수립되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혀 놓고자 한 것은 이승만이였다. 그렇게 하고자 한 데는 의도가 있었다.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에서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준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조선에 와서도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임(任)하여 자기네가 세워주겠다고 하고 있는 터입니다”라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에 수립 근거를 밝혀 놓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가 헌법 벽두(劈頭)에 전문(前文)에 더 써 낼 것은 「우리들 대한국민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서 기미년 3·1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 이렇게 넣었으면 해서 여기 제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땀땀대기에 이런 의미의 문구를 넣어서 우리의 앞길이 이렇다 하는 것을 또 3·1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때 진력(盡力)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²³⁾

22) 「大韓民國憲法」《官報》제1호, 大韓民國政府公報處, 1948년 9월 1일).

23) 大韓民國國會, 『制憲國會速記錄』1, 1987, 348쪽.

이승만은 제헌국회에서 수립하는 정부는 미국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세우는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문에 지금 수립하는 정부는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고, 이를 재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문에 넣고자 한 것이다.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근거를 밝혀 놓은 것은 이승만의 역사의식과 자주의식이 작용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사실’,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사실’을 동포들이 알도록 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독립을 선언하고 자주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는데,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이 ‘건국’을 한다면, 그 ‘건국’은 외세에 의한 것이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3) 임시정부와 동일한 연호 사용

대한민국 정부는 연호를 썼다. 연호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한민국’이란 연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수립 당시부터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사용하였고, 임시정부에서 생산된 문서에는 모두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썼다. 1919년은 ‘대한민국 원년’, 1945년은 ‘대한민국 27년’ 등으로 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임시정부가 사용하던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국회를 개원하면서 연호는 ‘민국’이라고 한다며 ‘기미년에서 기산(起算)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제헌국회에서는 ‘단기’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이승만은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정부문서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그 예를 들어본다.

㉠ 정부문서 제3호

대한민국 30년 8월 5일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대법원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²⁴⁾

㉡ 관보 제1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정부공보처 발행²⁵⁾

24) 『제헌국회속기록』, 757쪽.

25) 《관보》제1호, 대한민국정부공보처, 대한민국30년 9월 1일.

㉔ 대한민국 30년 9월 2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귀하
행정권 이양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²⁶⁾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다.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보내는 ‘대법원장 임명승인에 관한 건’에도,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에 보내는 ‘행정권 이양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에도 모두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또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정부공보처에서 《관보》를 발행할 때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사용한 것이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면 물론이고, 같은 국가에서도 황제가 바뀌면 새로운 연호를 사용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예를 들 것도 없다. 대한제국에서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1897년부터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고, 1907년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융희’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같은 대한제국이지만, 황제가 바뀌면 연호는 달리 썼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사용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시점도 1919년부터 계산하여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하였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한 연호를 사용한 것이다. 이로보면 1919년의 대한민국과 1948년의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로 볼 수 없다. 같은 국가이다.

4. 맺음말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밝히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하다. 그 핵심적인 방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우선 제헌국회가 개회할 때 국회의장 이승만이 정부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승만은 개회사를 통해 1919년에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재건·부활하는 형식으로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하였고, 연호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연호를 그대로 사용할 것과 그 시점도 1919년부터 계산하자고 하였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대체로 이승만이 제안한 범위를 넘지 않았고, 국호도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을 그대로 따랐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 근거도 밝혀 놓았다.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26) 『제헌국회속기록』, 1058쪽.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거를 천명한 것으로,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는 역사적 근거를 명문화해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7월 24일 대통령 이승만이 취임한 후 정부문서에 ‘대한민국 30년 8월 5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등, ‘대한민국’이란 연호로 표기한 것이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면 물론이고, 같은 국가에서도 황제만 바뀌어도 달리 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한 연호를 사용하였다.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건국’한다고 하지 않았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통치이념의 면에서 임시정부를 거의 완전하게 계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인적 구성면에서도 계승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소한 대한민국 건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하겠다. 만일 어떠한 공적 조직이 다른 공적 조직을 계승할 때 인적 요소보다 피계승 조직의 운영이념 계승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는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로, 1919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라는 인식 기반위에 작성된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1919년에 수립한 것은 ‘임시정부’만이 아니었다. 국가인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그 ‘대한민국’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한 것이고, 동일한 연호를 사용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1919년에 건립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19년부터 시작되었다.

27) 양동안,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대한민국 건국의 재인식』, 기파랑, 2009, 160쪽).



발제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

이현환 (아주대 교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 - 임시헌장과 헌법 등에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비전

이헌환 (아주대 교수)

I.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위상

우리나라는 5천 년간 다양한 공동체이념을 통해 국가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고조선시대에는 풍류도적 선도국가로,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대승적 불교국가로,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적 유교국가로, 그리고 20세기에는 민주공화주의에 바탕한 입헌민주적 법치국가로 변천해 왔다. 아마도 지구상의 숱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 중에서 이처럼 민족적 동일성과¹⁾ 하나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국가이념을 경험한 나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오랜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때로는 이민족에게 정복당하고 국가가 예측되어, 자주적·주체적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굴종의 삶을 살았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비록 공간적으로 위축되면서도 국가공동체를 완전히 상실하여 흩어져 소멸해버린 시대는 없었다. 현행헌법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이를 잘 압축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0세기 100년의 우리나라 헌정사,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말과 대한제국기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기의 역사과정을 반추하면서, 100년 전 ‘그 때,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새기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것은 21세기적 관점에서 보는 20세기 100년의 헌정사의 평가이다.

간단히 말하여, 조선말과 대한제국기는 당시의 대세이었던 서구사상의 주체적 수용과 그를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 건설이, 앞서 서구화를 경험한 일본제국에 의하여 「사실상」 좌절되었던 시기이다. 여기서 사실상이라 함은 일본제국의 일련의 점령과정의 강압성과 반규범성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동학농민군의 20m 사거리 소총과 일본군의 200m 사거리 소총으로 대변되는 힘의 불균형 속에서 외세의 침략에 무기력하였던 성리학적 유교국가 조선은, 수직적 신분질서의 상층부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수구세력과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개화세력 사이에 당랑거철(螳螂拒轍) 같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폐정개혁을 부르짖는 동학농민혁명과 군민공치(君

1) 여기서 민족적 동일성이란 단지 생물학적 동일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언어와 문화, 동질적 사고를 가지는 인류집단이라고 본다. 오랜 역사 동안 숱한 피섞임이 있었을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런 점에서 민족개념에서 생물학적으로 동일집단을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民共治)를 주장한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등 새로운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들이 이어지면서, 성리학적 유교국가의 수직적 질서를 폐기하고 만민평등의 수평적·평등적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주적·주체적 자각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자각은 성리학적 유교국가 조선을 서구의 국가논리에 따른 전제군주국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바뀐 전제군주국 대한제국 스스로 외세에 대응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주변국의 개입을 초래하면서, 마침내 일본제국에 강제병합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병합 당시의 대한제국의 신민들은 과거의 성리학적 유교국가적 질서와 그에 기반한 변형된 대한제국을 폐기하고 스스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3·1공화혁명이 그것이다.

독립선언서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들을 연계하여 살펴보면, 독립선언서는 자주독립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세계일가와 인류공영의 대동사상을 천명한 것이며, 임시정부 헌법들은 그러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하부원리와 원칙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국가의 기본이념이 삼균제도에 있음을 다시 밝히고, 강점상태에 있는 국토를 회복하는 복국(復國)과정의 행동준칙을 명시하며, 복국 후 건국기(建國期)에 헌법제정의 기본원칙과 이의 실천과정을 상세히 규정하였다. 따라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전체로서 보면, 국외적으로는 독립선언서의 대원칙을 선언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공화주의와 삼균사상을 근간으로 한 헌법을 통하여 상세히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에 이 문건들 이외에도 다양한 선언서와 문건들이 있고 그 주장과 내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더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문서로서 임시정부헌법으로 대부분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1945년 해방이 ‘도둑같이’²⁾ 찾아오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귀국과 함께 통일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토는 또 다시 분단되고 말았다. 과거 조선 말에는 서구와 그 아류이었던 일본제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국토가 침탈되었으나, 해방 후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외세가 이 땅에 다시금 선을 그어 버린 것이다. 그토록 서원했던 통일대한민국은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어 서로에게 적대적이면서 골육상잔(骨肉相殘)의 전쟁까지 겪었다. 70년 넘는 분단상황은 공간적 분리로 인해 각각 극단의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하여 상호배타성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라는 한계상황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어렵게 하였고, 독립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까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³⁾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선언된 건국강령의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은 아직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제 3·1공화혁명이 100주년이 되는 오늘날, 3·1공화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되새

2) 함석헌 선생의 표현.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2001, 377쪽.

3) 남북한의 임시정부연구에 대해서는, 강석승, ‘임시정부’, 남북한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자료, 2013 참조. 남한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이며,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에 의한 임시정부 왜곡을 지적하고 있다.

겨 확인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곧 통일대한민국의 정신적·이념적 기초를 제시하는 일이다.

E. H. Carr는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 갈파했거니와, 규범학으로서의 법학 특히 헌법학은 그에서 더 나아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인간사회의 현상들이 「존재(사실)-당위(규범)-인간(의지)」의 3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 보면, 사실의 전개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알고 그를 통해 의지지향으로서의 규범을 형성해가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3·1독립선언서의 기본이념과 정신을 검토하고, 그 실천과정으로서의 임시정부헌법의 정신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언급한다.

II. 3·1독립선언서의 기본정신

3·1운동은 1919년3월1일 태화관에서 그리고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3월3일의 고종인산일을 지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3·1운동은 그 참가자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 민족정신의 발로이며 민중의식의 표현이었으며,⁴⁾ 그 이념적 정화로서의 독립선언서 또한 민족정신과 민중의식이 독립에의 의지 속에서 집약되어 나타난 언어이었다.⁵⁾ 1762자로 된 긴 문장을 가진 독립선언서는 1917년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인의 「대동단결선언」, 조소앙의 1919년 2월1일의 「무오독립선언서(대한독립선언서)」, 1919년2월8일의 「2·8독립선언서」 등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독립선언서는 민중과 지도자들의 운동을 통합시키고, 반외세·반봉건을 핵심기반으로 하였으며, 비폭력적·평화적 저항을 민족정신으로 하는 민족자존을 드높이며, 제국주의를 넘어서 민족적 평등을 통한 세계평화를 주창하고 있다.⁶⁾ 그 외에도 인도적 민족주의, 자주독립, 자유, 평등, 평화, 진보, 정의 등등의 이념들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3·1운동의 내적 동력으로 개척정신, 평화주의, 전환의식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사상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⁷⁾ 100년 전의 시대상황에서 반외세·반봉건의 요구와 독립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필자는 오늘날의 상황과 관련하여 세계평화·세계일가의 대동사상을 주목하고 싶다.

독립선언서의 몇 구절을 보면,

4) 최남선, 三一運動의 現代史的 考察, 新世界, 1956.3., 18쪽.(홍일식, 주 7)의 글, 각주 23 재인용)

5) 홍일식, 3·1독립선언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1989.11., 207쪽.

6) 홍일식, 앞의 글 참조.

7) 조성환, 개혁종교의 평화사상 -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혁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종교교육학회·생명문화연구소 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39쪽 이하 참조.

「...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

「...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并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 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 也 全人類 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 何物이던지 此를 沮止 抑制치 못할지니라.」

「今日 吾人의 所任은 다만 自己의 建設이 有할 뿐이오 決코 他의 破壞에 在치 안이하도다.」

「... 東洋平和로 重要한 一部를 삼는 世界平和 人類幸福에 必要한 階段이 되게 하는 것이라 ...」

「新天地가 眼前에 展開되도다. 威力의 時代가 去하고 道義의 時代가 來하도다. 過去 全世紀에 鍊磨長養된 人道的 精神이 바야흐로 新文明의 曙光을 人類의 歷史에 投射하기 始하도다.」

「千百世 祖靈이 吾等を 陰佑하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を 外護하나니 ...」

라고 하고 있다. 100년 전 식민지의 암흑한 현실 속에서 이처럼 세계평화를 주창하면서 위력의 시대가 아닌 도의의 시대가 오리라 하고, 인도적 정신이 신문명의 서광을 비추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 심오한 정신적 바탕이 없다면 그저 현학적인 학인의 외침으로만 평가될 것이다. 독립선언서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념이 개인적 자유와 민족적 평등 그리고 인류적 평화의 3자 일체라 할 때, 그것은 바꾸어 말해 조선의 독립이 그 내향에 있어서 휴머니즘의 정신과 그 외향에 있어서 평화의 이념을 아울러 포괄하는 것임을 의미한다.⁸⁾

독립선언서에서 주창하는 세계평화사상은 오늘날의 전지구적 공동체에 매우 적합한 사상으로 생각된다. 즉,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세계평화사상은 당시의 제국주의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한 일원적 문명주의를 넘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고, 상호관련적(interconnected)이며, 상호관계적(interrelated)이고, 상호협력적(cooperating)인 인간관과 사회관 그리고 국가관을 바탕으로 하는 다원적 문명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곧 세계일가의 대동사상과 상통한다 할 수 있다. 과거 개별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를 의미하는 ‘국제적(international)’ 관계만을 인식하고 패권주의에 매몰되거나 혹은 자국중심적이거나 자민족중심적 사고에 집착한다면, 다시금 근대적인 대립과 투쟁의 세계로 되돌아가고 말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오늘날의 세계는 ‘국제적(international)’이 아니라 ‘글로벌(global)’한 세계이다. 따라서 전체 인류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를 위한 이념과 사상이 필요한 시대이다. 예컨대,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국제적(international)’ 인권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느 한 국가를 중심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지만, ‘글로벌(global)’ 인권은 말 그대로 인류(human-being)라는 관점에서 인권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요컨대 3·1 운동기의 사상과 실천에서 시대와 현실을 고민하던 혁명세력들의 ‘평화’는 서구사회에서와 같이 정치적 협상으

8) 홍일식, 앞의 글, 219쪽.

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등, 민주, 민권의 평화라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평화를 지향하고 있었다.⁹⁾ 그런 점에서 독립선언서의 세계평화사상은 21세기인 오늘날에 되살려 세계인들에게 전파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리의 고유사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의 기본정신 : 민주공화주의와 삼균주의(三均主義)

1. 임시정부헌법의 기본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1919년4월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제정되었으며, 1919년9월 11일 1차 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 1925년4월7일 2차 개정된 대한민국임시헌법, 1927년4월11일 3차 개정된 대한민국임시약헌, 1940년10월9일 4차 개정된 대한민국임시약헌, 1944년4월22일5차 개정된 대한민국임시헌장 등을 모두 포함한다. 1919년4월11일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은 약간의 관여자가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조소앙이 작성했다고 한다.¹⁰⁾ 이후의 개정과정과 개정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¹¹⁾ 5차에 걸쳐 개정된 임시정부헌법의 내용을 그 정신의 측면에서 간단히 축약하면, 민주공화주의와 삼균주의로 요약될 수 있다. 3·1공화혁명의 결과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지향한 국가형태가 민주공화제이었고, 비록 1차 개헌과 4차 개헌에서 그 표현이 삭제되기는 했으나, 그 의미상으로는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동안 변하지 않은 국가구성원리였다. 삼균주의는 조소앙이 주창한 사상으로서 1930년대 초에 이론적으로 완성되어 특히 1941년의 건국강령에서 구체적 실천이론으로 발전하였다.¹²⁾

이하에서는 임시정부헌법의 핵심내용으로서의 민주공화주의와 삼균주의를 소재로 하여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임시정부의 정신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임시정부헌법상의 민주공화주의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와 ‘공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수용 초기에는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공화는 군주국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군주제도가 아닌 체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¹³⁾ 또한 민주에 대해서는 공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또는

9) 이지원, 3·1운동기의 평화사상 - 조소앙과 한용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41권4호, 2018.12., 61쪽.

10) 한인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제정의 역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3호, 2009.9., 172쪽.

11)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집문당, 1983이 있고, 헌법학자의 저술로는,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244쪽 이하에서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12) 박해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사상 - 삼균주의의 이론체계 -, 석당논총 제21집, 1995, 350쪽 이하 및 360쪽 참조.

공화보다 하위의 개념으로 이해했다.¹⁴⁾ 따라서 민주와 공화는 군주국과 대립되는 체제라는 개념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화제를 지향한 독립운동단체는 신민회로 알려져 있다.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 등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항일비밀결사인데 공화제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적은 없으나 내부적으로는 공화제를 지향하였다. 1910년 일본의 대한 제국 강점으로 국토가 침절당한 후 공화제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1911년 중국 신해혁명의 성공은 공화제 논의를 촉발시켰고 국권 회복 이후의 정제로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1917년 상하이에서 신규식, 조소앙 등이 주축이 되어 발표한 「대동단결선언」은 독립 이후 수립되는 국가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표명했다. 이 선언을 통해 간간이 흘러나왔던 복벽주의운동은 완전히 종식되었고 해방 후 세워질 새로운 나라의 정체성으로 민주공화국이 공식화되었다.

1919년3월1일의 3·1운동은 단순한 독립운동 차원을 넘어 민주공화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1919년4월11일 선포된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헌법에 ‘민주공화’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은 다른 헌법문서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창적인 것이었다.¹⁵⁾ 조선말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온 공화사상은¹⁶⁾ 일면으로 강점권력 일본국에 대한 저항으로, 타면으로는 독립 후 성취할 국가공동체의 형성 및 통치원리의 기초로 인식되었다. 3·1독립선언서에는 직접적으로 민주공화주의 이념이 표현되지 아니하였지만, 3·1운동 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에서 민주공화주의가 명시되었다. 임시정부 헌법이 민주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한 이유는 첫째, 국권의 계속성과 정통성을 합법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둘째, 3·1운동을 봉건군주제와 제국주의적 강압에 반대하는 근대적 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으며, 셋째, 국가와 민족중흥의 힘과 가능성을 국민의 내적 역량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자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이다.¹⁷⁾ 임시헌장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이라 하여 국민 모두가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국가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국가를 지향함으로써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거부하였음을 의미하였지만, 그렇다고 사회주의적 의미의 평등도 아니었다. 임시헌장에서 말하는 평등은 ‘평등으로서의 대동’을 함축한 세계, 곧 대동세상을 의미하지 사회주의사상에서 말하는 평등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사회주의에서 평등은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유를 전제하는 데 반해, 대동세상에서 말하는 평등은 국가의 소유를

13) 이영록,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2, 2010, 53쪽.

14) 이영록, 앞의 글, 54-55쪽.

15) 이상훈, 민주공화주의의 기원 - 20세기초 아방가르드적 정치한류 -, 철학 제124집, 2015.8., 122쪽.

16) 이태진, 고종시대의 ‘민국’이념의 전개 - 유교왕정의 근대적 ‘공화’지향, 진단학보 제124호, 2015.8. 참조.

17) 이상훈,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 이념, 시대와 철학 2012 제23권 4호(통권 61호) 참조.

18) 신주백, 1910년 전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체로 정치이념의 전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호, 2017, 175쪽.

전제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임시현장과 정강에서 말하는 평등에 관한 인식은 민족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국가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국가의 평등, 나아가 인류의 평등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정강 제1조). 우리나라의 민족운동은 출발선상에서부터 배외주의적인 태도를 배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수평적 국제연대를 일상적인 과제로 제기한 점은 우리나라 민족운동의 특징이었다.

임시정부 시기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은 단순히 군주국이 아님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뜻하는 차원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는 임시정부가 개인·시장·경쟁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이념보다는 공공선과 공동체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이념을 견지하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헌법적으로 결합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¹⁹⁾ 이러한 점에 비춰 볼 때 민주공화주의는 한국적 정치사상으로서, 애국지사들이 일본의 강점에 저항하기 위해 서구사상을 수용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정치철학적 이념이라 할 것이다.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동아시아에 자유와 평등 및 평화를 제창하면서 20세기 초를 수놓았던 최초의 정치적 한류였던 것이다.²⁰⁾

3. 삼균주의

1) 이론화 과정

3·1공화혁명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한편으로는 민주공화제를 정착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 후 건설할 신국가에 대한 계획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독립운동가들은 일제로부터의 광복운동과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운동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이 조소앙(1887-1958)이었다. 그는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대동단결선언’, ‘대한독립선언서’ 등의 선언서를 기초하거나 임시정부의 각종 선언 등을 작성하여 발표하면서, 임시정부의 대표적 이론가이자 사상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소앙은 독립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분열된 독립운동가들을 대동단결시키며, 전통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서구사상과 접목하여 정당성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²¹⁾ 조소앙이 1919년 2월에 발표한 대한독립선언서에는 독립을 달성하여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와 민족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치·경제·교육·사회의 균등에 기초한 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것과, 민족평등·국가평등을 실현하여 국제평등으로 나아간다는 독립운동의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삼균주의의 초보적 단계이었다.

1919년부터 1921년까지 2년여에 걸친 유럽에서의 활동과 경험은 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

19) 서희경·박명림, 민주공화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이념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30(1), 2007, 참조.

20) 이상훈, 철학 제124호, 2015.8., 136쪽.

21) 이상익, 조소앙 삼균주의의 사상적 토대와 이념적 성격, 한국철학논집 제30집, 2010, 90쪽.

다. 유럽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적 안목을 갖게 된 것이다. 이후 1930년경에 독립운동이 추구할 이념과 목표를 정립하여 삼균주의로 완성하였다.

2) 삼균주의의 이론체계

삼균주의의 핵심개념은 ‘균등’ 또는 ‘평등’이었다. 조소앙은 그 근거에 관하여 우리의 고유사상을 언급하여, ‘首尾均平位하여 興邦保泰平함이 弘益人間하고 理化世界하는 最高公理’라고 하였다. ‘首尾均平位 興邦保泰平’은 神誌祕詞에서 그리고 ‘弘益人間 理化世界’는 檀君神話에서 차용한 것이었다. 그가 말하는 삼균(三均)은 개인과 개인(人與人), 민족과 민족(族與族), 국가와 국가(國與國)의 완전균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첫째,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보통선거제·국유제·국비의무교육제를 통하여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둘째,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민족자결주의를 자민족과 타민족에게 적용함으로써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피통치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와 국가와의 균등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를 부정하고 모든 국가가 서로 간섭하거나 침탈하지 않는 국제생활에서의 평등한 지위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삼균이 철저하게 행해질 때에 비로소 완전평등한 국제생활이 이루어지며 사해일가·세계일원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았다.²²⁾ 또한 개인은 사회, 민족, 국가 내지 세계조직의 분자로서 물질구성의 원자 내지 전자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행하기 위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과 복합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²³⁾ 아울러, 개인과 개인의 균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보통선거를 통한 정치의 균등(均權:政權),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를 통한 경제의 균등(均富:利權), 무상교육을 통한 교육의 균등(均智:學權)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체계를 가진 삼균주의는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내부적으로 한민족의 동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외적으로는 한민족이 인류의 공헌체로 존재할 가치를 이론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은 민족내의 계급을 극복한 민족의 동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광복 후 민족국가 건설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은 민족의 특수성을 국제적 보편성과 모순없이 존립시켜 인류의 공헌체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22) 김용신, 조소앙 삼균주의의 역사적 위치, 사총 제23권, 고려대 역사연구소, 1979.12., 58-59쪽.

23) 김용신, 위의 글, 60쪽.

24) 한시준, 사학지 제49집, 2014.12., 304쪽.

3) 건국강령과 삼균주의

조소앙이 창안한 삼균주의는 한국독립당의 창당을 계기로 임시정부의 정치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임시정부 내에 민족유일당운동이 결렬된 후, 좌우의 세력이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1930년1월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삼균주의를 정치이념으로 수용하는 黨義·黨綱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아울러 1931년 4월, 광복 후에 건국할 새로운 민족국가의 大綱을 밝힌 건국원칙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선언’에서도 수용되었다.

1941년 11월에 또다시 광복 후 신국가 건설계획으로 ‘大韓民國建國綱領’이 공포되었다. 1941년 11월 28일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된 건국강령은 總綱·復國·建國의 3개章과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총강에서는 민족의 과거 내력을 통해 앞으로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복국과 건국에서는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여 신국가를 건설하기까지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마다 수행하고 추진할 임무·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강령에 규정한 신국가 건설은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건국강령은 삼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철저한 균등사회를 건설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방안의 핵심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최대다수의 균등생활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정치·경제·교육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은 국유로 한다는 전제하에 국가의 계획경제 및 합리적 분배, 무산자의 생활보장 등을 통해 생활균등을 실현한다고 하였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비 의무교육제도의 원칙하에 교육에 대한 정책 및 시설 등을 국가에서 통제 내지 관할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하였다.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가 독립 후에 건설하고자 했던 국가는 ‘신민주국’이었다. 신민주국은 전 민족 대다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였다. 또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 즉 ‘뉴 데모크라시’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신민주라 함은 민중을 우롱하는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며 무산자독재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범한민족(汎韓民族)을 기반으로 하고 범한국국민(汎韓國國民)을 단위로 한 ‘전민적(全民的) 데모크라시’라고 표현하였다.²⁵⁾ 이는 구민주주의에 따른 기존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그 방법으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한 신민주국을 건설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신민주국의 국가상은 민족주의와 삼균주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신민주국 건설의 최고목표는 민족최대다수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었고, 모든 한국민족과 국민을 토대로 한 민족국가였

25) 김용신, 앞의 글, 74쪽.

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정치이념이 바로 삼균주의였다. 임시정부가 독립 후 건설하고자 하였던 신민주국은 삼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것으로, 신민주국은 곧 삼균주의 국가이었다.²⁶⁾

4. 제헌헌법에의 영향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1945년 해방 이후 분단상태에서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948년의 제헌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임시정부헌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다. 제헌헌법의 기초자인 유진오박사는 헌법초안을 작성하는 데에 참고한 10종의 문서들 중 절반 이상이 조소앙이 직접 작성한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었다.²⁷⁾ 특히 조소앙이 작성한 임시정부헌법 및 건국강령과 같은 관련문서들은 결코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임시정부헌법과 제헌헌법 사이에 특히 조소앙의 삼균주의의 영향관계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한다면,

첫째로, 정치균등과 관련하여, 조소앙의 주장에는 보통선거와 평등선거가 있고, 1948년 헌법에서도 공무원선거권 규정(제25조)과 국회의원선거권(제32조)이 있어서, 보통선거제와 의회제라는 정치균등의 출발점은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수 있는 기초로 작용하였다. 둘째로, 경제균등과 관련하여, 건국강령에서 대단위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 1948년 헌법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농지분배, 중요기업이 국공유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등을 규정하였다. 셋째로, 교육균등과 관련하여, 1948년 헌법상의 교육조항의 사상적 아버지로 조소앙을 꼽을 만큼²⁸⁾ 그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IV. 맺음말

규범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난 20세기의 우리나라 헌정사는 조선 - 대한제국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남북한이라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⁹⁾ 그렇다면 대한제국은 3·1공화혁명을 거쳐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그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일본제국의 강점을 불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대한제국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면, 일본제국의 강점 및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그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왜냐 하면 시간적으로 이미 소멸된 국가가 저항운동을 통해서 부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6) 한시준, 앞의 글, 313쪽.

27) 신우철, 임시정부가·해방기 헌법문서와 조소앙의 헌법사상, 중앙대 법학논문집 제41집 제1호, 2017, 45쪽.

28) 황승흠, 제헌헌법 제16조 교육조항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2011.2., 580쪽.

29) 줄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1집 2010.12.; 김창록, 법적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정체성, 법과사회 59호, 2018.12. 273쪽 이하 참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5년 해방 후 그 정통성이 남한의 대한민국에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방 후 미·소 간의 분할 점령선인 3·8선에 의해 공간적으로 제한되어버린다. 오히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남북한 정부의 상위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한은 통일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잠정적·과도적 정부로서의 위상을 가지면서 통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관계로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3·1공화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난 독립선언서와 그에 이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및 건국강령 등이 추구했던 기본정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1공화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공화주의가 서구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이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이념으로서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통하여 남북간의 민족의 통합을 위한 제3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아마도 삼균주의의 완성은 통일대한민국의 민주, 공화, 균등의 삼위일체화가 달성되는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발제 3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과

배영대 (중앙일보 근현대사연구소장)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과

배영대 (중앙일보 근현대사연구소장)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은 누가 넣었나
3.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
4. 카이로선언과 국제공동관리 문제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1943년 12월 1일 미국·영국·중국 세 나라의 수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3국회담을 개최한 후 발표한 성명을 ‘카이로선언(The Cairo Declaration)’이라고 부른다. 이 회담의 결과가 2차대전 이후의 동북아와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기본원칙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데,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카이로선언의 한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에 말한 세 강대국은 한국 백성의 노예상태를 유념하고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자유로워지고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한다.”(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¹⁾

카이로회담은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연합국 수뇌 모임이었다. 그 회담의 결과를 담은 카이로선언에 ‘한국(Korea)’이 언급되며 독립이 보장되고 있음을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이로선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코리아 독립 선언’이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다. 이 카이로

1) “Final Text of the Communiqué”, *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s*, 1943,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 1961, p.449.

선언에는 우리가 풀어내야 할 두 개의 ‘비밀 코드’가 들어 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식민지가 된 수많은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들 가운데 유독 ‘한국(Korea)’만 두 번 씩이나 명기해 놓은 배경이 무엇일까,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다. 두 번째 비밀은 한국의 국명과 함께 쓰인 ‘자유와 독립’이란 표현이 쓰인 점이다. 자유는 대개 평등과 한 쌍으로 묶여 ‘자유와 평등’으로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유와 독립’을 병렬 표기하는 낯선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에서 주목해봐야 할 대목은 ‘한국의 자유와 독립 회복’이란 문구와 ‘적절한 시점’이란 문구다. 이 문구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일까. 그 배경에 대한 기존 연구는 ‘한국의 자유와 독립 회복’ 부분에는 중국(대만) 장개석의 의중이 반영되었고, ‘적절한 시기’ 부분에는 미국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

이런 해석은 중국 국민당측의 전통적 해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1960년대 이후 한국에 많이 소개된 입장이다.³⁾ 이와 함께 한국 학계에서는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에 대한 중국 장개석의 공헌과 함께 그 배경으로 작용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노력을 언급해왔다.⁴⁾

이런 가운데 카이로선언에 대한 색다른 주장이 2010년 정일화에 의해 제기됐다. 정일화는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 조항이 들어간 것은 장개석의 역할이 아니라 루스벨트와 그의 참모였던 홉킨스(Harry Hopkins) 덕분이었다고 주장했다.⁵⁾ 정일화는 한국 조항에 미친 장개석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그 대신 홉킨스의 역할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정일화의 주장에 기반해 2013년에는 이승만의 대미외교가 카이로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주장까지 유명익에 의해 제기되었다.⁶⁾

이는 카이로선언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뒤집는 과감한 주장이었다.⁷⁾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그해 7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했다. 카이로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에서 이완범이 「카이로선언의 결정과정에 대한 고찰」을 발표했다. 이완범은 카이로선언에 한국독립문제가 들어가게 된

2)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512~538쪽;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2014, 5., 『역사비평』 2014년 여름호;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2014;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017, 580~635쪽.

3) 대표적으로 대만정치대학의 호춘혜(胡春惠) 교수는 중국 측 문헌을 인용해서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이 한국 독립 주장을 제출해 미국·영국의 동의를 얻어 ‘전후 한국 독립의 지위 문제’가 원칙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서술했다.(胡春惠 지음, 辛勝夏 번역, 『中國인의 韓國獨立運動』, 단대출판부, 1978, 263쪽). 조순승 역시 카이로회담에서 영국이 한국 독립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나, 장개석의 각별한 노력으로 루스벨트의 동의를 얻어 한국 조항이 포함되었다고 보았다(趙淳昇, 『韓國分斷史』, 형성사, 1982, 25~26쪽). 카이로회담 당시 선전부 부부장(副部長)으로 중국대표단의 수행원이었던 홀링턴 톱(董顯光, Holington K. Tong)은 주일 중국대사 시절인 1953년 8월 당시 이승만의 공보고문 올리버(Robert T. Oliver)에게 한국 독립의 약속이 카이로선언에 삽입된 것은 전적으로 장개석의 제안 때문이라고 단언했다(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Dodd Mead and Company, New York, 1954, pp. 364~365; 조순승, 앞의 책, 1982, 26쪽;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三)』,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81, 509쪽). 이상 정병준 논문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에서 재인용.

4)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512~538쪽.

5) 정일화, 「중국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 선한약속, 2010, 476~510쪽.

6) 유명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생애·사상·업적의 새로운 조명」, 일조각, 2013, 57~63쪽.

7) 카이로선언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가장 중요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정일화의 책이 나오기까지 ‘카이로선언’을 제목으로 내건 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도서관에서 ‘카이로선언’을 입력하면 정일화의 책만 보인다.

것은 장개석의 주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 장개석을 움직인 것은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라는 점, 그리고 이승만의 역할보다는 김구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내세우며 전통적 견해를 다시 복귀시켰지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였다.⁸⁾ 많이 들던 당연한 얘기보다 돌발적인 주장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이후에 나온 카이로선언 관련 논문은 대개 정일화와 유영익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되곤 한다. 2014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5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이란 주제 아래 열리게 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 이 자리에서 정병준이 발표한 논문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도 정일화와 유영익의 주장을 겨냥하면서 전통적인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었다.⁹⁾

정병준의 논문은 루스벨트와 홉킨스의 역할을 다시 원래대로 장개석의 역할로 되돌려놓는 것이었다. 그해 12월엔 한시준의 논문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발표되어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특히 한시준은 카이로선언과 함께 신탁통치 방안을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카이로선언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¹⁰⁾ 큰 틀에서 보면 이완범, 정병준, 한시준의 카이로선언에 대한 논문은 신용하 등에서 정립된 전통적 시각을 다시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을 누가 주도해 작성했는가, 장개석인가 루스벨트인가, 김구인가 이승만인가, 중국인가 미국인가. 정일화, 유영익의 주장으로 인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논전이 전개되었다. 카이로선언의 팩트를 놓고도 이념 논전이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완범, 정병준, 한시준이 전통설을 다시 복원한 가운데 2017년에 황태연은 『갑진왜란과 국민전쟁』을 출간하여 카이로선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전통적인 시각에서조차 다소 미진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까지 회복시킨 것이다.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하고 군사동맹까지 맺은 장개석이 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독립전쟁을 멈추지 않은 점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승만 본인이 카이로선언에서 김구와 윤봉길의 역할이 컸다고 상찬하는 문건을 찾아냄으로써 카이로선언의 작성 주체를 둘러싼 논전은 이제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8) 이완범, 「카이로선언의 결정과정에 대한 고찰」, 2013. 평화통일시민연대와 아시아사회과학원의 주관으로 2013년 7월 24일 카이로선언 7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대주제: 카이로선언 정신 구현과 아시아의 평화문제)에서 발표했다. 한시준의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재인용.

9) 정일화는 장개석이 카이로회담 중 단 한 번도 한국 문제를 공식 거론한 적이 없으며, 11월 23일 저녁 만찬회담에서도 루스벨트가 먼저 한국 독립 문제를 거론하자 이에 수동적·소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주장했다(정일화, 위의 책, 71~73, 458~459, 476~478, 485~488쪽). 정일화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병준은 “기초적 사실 확인에 실패하고 자료를 오독함으로써 전도된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10)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2014년 12월.

11)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경인문화사, 2006, 512~538쪽.

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10년 사이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의 삽입 주체를 둘러싸고 전개된 이념 논전과 그에 대한 연구사를 간략하게 되돌아보려고 한다. 카이로선언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이 정일화와 유영익에 의해 부정되고, 정일화와 유영익의 주장은 다시 이완범, 정병준, 한시준에 의해 반박되면서 전통설이 회복되고, 나아가 황태연에 의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재조명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지난 10년간의 학술 진행 과정을 되짚어보는 가운데 카이로 선언에 대한 이해가 논전이 벌어지기 이전보다 훨씬 심화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2.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은 누가 넣었나

제2차 대전 때 한국만 약소 식민국이지 않았다. 독립을 희망하는 수많은 약소 식민지 중 유독 한국을 지목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언급까지 보태며 독립을 보장한 배경이 무엇일까. 한국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확정된 선언이었음에도 우리는 그간 당연하게만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전통설을 부정하는 정일화의 책이 2010년 출간되고, 카이로선언 70주년을 맞는 2013년에는 유영익이 저서 『건국대통령 이승만: 생애·사상·업적의 새로운 조명』을 출간하면서 카이로선언의 주역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지목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카이로선언에 대한 우리의 본격적인 연구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¹²⁾ 한국사 학계의 원로이자 이승만 전문가이기도 한 유영익이 전통설을 뒤집는 주장을 내놓았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카이로선언 탄생의 가장 큰 한국인 공로자는 이승만”이라고 주장했다. 카이로선언의 외국인 공로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특별보좌관 해리 홉킨스를 지목했다. 그에 대한 반박이 시작되며 우리의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깊어지기 시작했다.

정일화·유영익이나 이완범·정병준·한시준이나 모두 카이로선언이 한국이 독립하는 결정적 계기였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시각이 갈라지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문구를 누가 넣었느냐하는 점이었다. 논전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독립운동을 새롭게 쓸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작업이었다.

유영익의 주장은 장개석과 김구, 윤봉길의 역할을 배제한 정일화의 주장을 근거로 하면서 거기에 이승만의 대미 외교활동을 추가로 접목시켜 내놓은 것이었다. 카이로선언의 한국 독립 조항을 장개석이 넣은 것으로 보는 전통적 시각에 대해 유영익은 “최근의 연구성과를 보면 장제스에게 한국 독립 문제를 먼저 제기한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고, 카이로선언 초안 작성자도 루스벨트의 특별보좌관 해리 홉킨스였다. 정일화 박사가 『대한민국 독립의 문, 카이로선언』(2010)에서 밝혀낸 획기적 성과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유영익은 “독립운동가로서 이승만은 비록 상하이 임시정부와

12) 배영대, ‘유영익 인터뷰’, 중앙일보, 2013년 5월 13일자.

하와이 교민사회를 원만히 이끄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 행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으로 카이로선언을 이끌어내는 숨은 공을 거뒀다”며 “이승만이 1919년부터 45년까지 끈질기게 전개한 외교독립운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유영익에 따르면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통해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한국 독립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주장인데, 그와 관련해 유영익은 이승만의 ‘편지 외교’를 주요 증거 자료로 내세웠다. 유영익은 그의 신간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시 국제정세를 되돌아볼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홉킨스에게 영어로 한국 독립 의사를 전할 사람은 이승만 외엔 없다. 카이로선언 이전 이승만은 적어도 세 차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다. 1941년 펴낸 영문 저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를 루스벨트 대통령과 그의 부인 엘리너 여사에게 보낸 사실도 기억돼야 한다.” 이승만의 ‘편지 외교’와 관련해 유영익이 가장 주목한 것은 1943년 5월 15일자 편지다. 이 편지에서 이승만은 미국이 1882년 조선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반해 1905년과 1910년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도록 도운 일을 상기시키면서 동아시아를 시작으로 불행한 사태가 확산된 것은 독립된 한국이 동양 평화의 보루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 편지에 대해 유영익은 “아주 잘 쓴 편지다. 5월 26일 루스벨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세밀한 주의’라는 회답이 온 것으로 볼 때 루스벨트 대통령이 봤거나 아니면 적어도 홉킨스가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¹⁴⁾ 이런 이승만의 편지 외교를 통해 루스벨트와 홉킨스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었다.

유영익은 이승만의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대해 “이승만은 1942년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를 결성해 워싱턴에서 활발한 로비활동을 펼쳤다. 대부분 독실한 기독교인들로 구성됐다. 한국 독립을 요청하는 진정서에 서명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독교계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영익의 서술에서 보이는 이승만의 외교적 독립운동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카이로선언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좀 더 많은 연결 고리가 필요한 것 같다. 카이로회담에 참석한 루스벨트·홉킨스와 이승만의 역할을 ‘편지 외교’로 연결시킨 것은 아직은 추정 수준이라는 얘기다. 만일 유영익의 추정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우리 근현대사를 수정해야할 정도의 대단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유영익의 저서에 대한 서평을 쓴 김명섭은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1943년 카이로선언에 한국 독립이 명기된 것과 관련해서 기존의 장제스(장개석) 중화민국 총통의 기여설보다 미국 대통령 프

13) 배영대, ‘유영익 인터뷰’, 중앙일보, 2013년 5월 13일자.

14) 배영대, ‘유영익 인터뷰’, 중앙일보, 2013년 5월 13일자.

랭클린 루스벨트 기여설을, 그리고 다시 루스벨트에게 ‘서한(書翰) 외교’를 펼쳤던 이승만 기여설을 주장한다.···(중략)···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의 방향을 제시한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광복이 명기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것을 이승만의 공적으로 보는 이 책의 주장이 맞다면 광복운동사에서 이승만의 외교노선은 더 크게 평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정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승만의 미국 내 기독교 커넥션 등의 정황적 방증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카이로선언의 초안자였던 해리 홉킨스(루스벨트의 특별보좌관)나 루스벨트가 구체적으로 ‘이승만 외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확증이 필요하다.”¹⁵⁾

정일화와 유영익의 주장은 이승만 본인이 카이로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일거에 논박될 수 있다. 이승만은 이봉창·윤봉길·최흥식·유상근 등 한인애국단원들의 의거를 기록한 『도왜실기(屠倭實記)』의 국역판(엄항섭판)에 붙인 1946년 6월 2일의 ‘서문’에서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을 들어가게 만든 공로를 윤봉길·김구·장개석에게 돌리고 있다.¹⁶⁾ 이승만이 쓴 글의 내용은 이렇다.

윤 의사의 장거(壯舉)가 있는 후로 중국 관민(官民)의 한인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와 신뢰로 일변해 한·중 양국은 자고로 순치(唇齒)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니, 국민정부는 물론이요 장개석 주석 부처가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해 음으로 양으로 대한 임시정부를 성원해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도 한국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주석이 솔선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 원인이 윤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윤 의사가 던진 폭탄 1개는 단순히 테러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 의의와 영향이 중대하니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바, 소위 “최소의 희생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얻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¹⁷⁾

김구·윤봉길·장개석이 카이로선언의 수훈자들임을 이승만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승만은 1년 뒤 1947년 4월 13일 남경을 방문해 장개석을 예방한 자리에서 “장 주석이 카이로회의 시 한국독립 주장을 적극 옹호해준 데 대해 재삼 감사의 예를 표한다”는 말로 장개석 총통에게 한국민의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했다.¹⁸⁾ 이 감사의 말은 이승만이 카이로선언 공표 직후

15) 김명섭, 유영익 지음 『건국대통령 이승만: 생애·사상·업적의 새로운 조명』 (일조각, 2013)에 대한 서평, 중앙일보, 2013년 5월 18일자.

16)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30쪽.

17) 이승만, 「서문」, 김구(엄항섭 역), 『도왜실기(屠倭實記)』, 667쪽. 고덕과 밑줄은 필자가 했음.

18) 『申報』, 1947년 4월 14일 ‘이승만, 장 주석 회견, 한국 인민을 대표해 경의를 표시’. 석원화·심민화·패민강(대한민국임시정부

1943년 12월 9일 루스벨트에게 보낸 개인서신에서 “3천만 한국인이 일제의 가혹한 폭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유념해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이 감사한다”고 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이름이 한국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것”¹⁹⁾이라고 찬사를 표명한 것과 차원이 다른 말이다. 전자는 나중에 사정을 잘 알고 나서 진심어린 감사를 표한 것인 반면, 후자는 한국독립에 대한 루스벨트의 미온적 태도나 속셈, 그리고 “in due course”의 뜻을 모른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감사를 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1944년 9월에 가서야 중경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라 루스벨트에게 서한으로 “in due course” 문구의 해명을 요청하기 시작했다.²⁰⁾

이승만 자신이 카이로선언의 수훈자를 장개석·김구·윤봉길로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 작성 주체를 둘러싼 논전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미회교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승만이 독립외교를 전개한 공로는 그 성과를 떠나 그 자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이 들어가는 과정에 이승만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 듯하다.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 공로를 따지자면 먼저 김구·윤봉길·장개석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승만 자신이 카이로선언 속 한국조항의 공로를 장개석·김구·윤봉길로 돌리는 『도왜실기』의 새로운 발견으로 사실상 이 논전은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 본인이 장개석·김구·윤봉길의 공로로 인정하고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왜실기』 속 이승만의 ‘서문’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다.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을 다룬 문헌들을 조사해 정일화와 유영익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일이 필요했다. 이완범, 정병준, 한시준의 논문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 관련 장개석의 역할을 부정하는 유영익의 주장은 정일화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유영익은 이와 관련 “장개석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카이로에서 열린 회담 도중 한국 문제를 공식 거론한 일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11월 23일 저녁 루스벨트 숙소에서 초대돼 루스벨트가 한국 독립 문제를 먼저 거론하자 이에 수동적·소극적으로 찬성했다”고 주장했다.²¹⁾ 카이로선언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부정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병준은 1943년 11월 23일 루즈벨트·장개석 회담에서 한국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으며, 카이로선언의 초안들 속에서

구청사 관리처) 편(김승일 역), 『중국언론 「신보」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역사공간, 2004), 485쪽. 황태연, 위의 책, 631쪽 재인용.
 19) Syngman Rhee to Franklin Roosevelt, December 9, 1943. Young Ick Lew (ed.),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 in English, 1904-1948*, Vol. 1 (Seoul: The Institute for Modern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2009), 527쪽.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63쪽에서 재인용.
 20) The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Hallym University (ed.), *United States Policy Regarding Korea, 1834-1950* (The Institute of Asian Culture Studies, 1987), 88쪽. 유영익, 『건국대통령 이승만』, 344-345쪽.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31쪽에서 재인용.
 21) 배영대, ‘유영익 인터뷰’, 중앙일보, 2013년 5월 13일자.

한국조항은 어떤 논의와 변화 과정을 겪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식으로 반박했다. 즉 장개석이 카이로회담에서 한국 문제를 공식 거론했으며, 그것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루스벨트를 설득하는 과정을 문서로 입증하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병준이 카이로선언의 전통설을 입증하기 위해 찾아낸 문건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종류다.

- ① 1957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미국에 제공해 『미국 외교문서(FRUS)』에 실린 기록
- ② 1953년 대만에서 간행된 『카이로회의기실(開羅會議紀實)』
- ③ 1981년 대만에서 간행된 사료집(『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카이로선언 작성 주체 논점이 벌어진 가장 큰 배경은 한국 문제가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1943년 11월 23일 루즈벨트·장개석 만찬회담에 대해 미국측이 남긴 공식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날 회담에 관한 중국측 기록은 여러 건이 존재하고 있다. 이 회담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날의 회담에 대한 미국측 기록은 중국으로부터 전해 받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카이로회담을 다룬 『미국 외교문서(FRUS)』에 1957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제공한 ‘회담요약’이 실려 있는 것이다. 중국측 기록을 미국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루스벨트-장개석 회동의 기록을 미국이 남기지 않은 배경으로 미국은 이날 회동을 정상 간의 자유로운 만찬자리로 생각하면서 공식적인 혹은 중요한 회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²²⁾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시 연합국의 수뇌로 공인받는 회담이었으므로 관련 기록을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국 문제에 대한 관심의 강도에서도 중국은 미국·영국과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²³⁾

지금까지 학계에서 주로 인용되어온 카이로선언 관련 기록은 1953년 대만에서 간행된 16쪽 분량의 『카이로회의기실(開羅會議紀實)』이라는 팸플릿이었다. 여기에 더해 1981년 대만에서 카이로회담 당시 장개석의 비서장으로 일했던 왕충혜(王寵惠)의 회담 일지 등 카이로회담 기록이 사료집(『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 第3編 戰時外交(三)』)으로 간행되었다. 카이로회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중국 측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⁴⁾ 이같은 자료는 이완범, 한시준도 중요하게 분석 대상으로 올린 자료들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카이로선언에 대한 전통적 시각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크게 조명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정일화, 유영익의 주장이 나오고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이같은 기록들을 통해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은 보다 상세하게 분석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22) 정병준, 위 논문 309쪽 참조.

23) 한국의 독립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황태연의 분석에서 더욱 상세하게 밝혀진다.

24) 정병준, 위 논문 참조.

3.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할

카이로선언에 한국 조항을 넣은 공로가 장개석 중국 총통에게 돌아간다면 그는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했을까. 장개석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려는 마음을 먹게 된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텐데, 그 계기는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공원 작탄(炸彈) 의거(1932.4.29.)였다. 장개석은 자신의 일기에다 윤봉길 의거에 대한 느낌을 여러 차례 밝혀 놓았다. “중국의 백만 군대가 해내지 못한 위업을 한국의 한 청년이 능히 처리했으니 장하고도 장한 일이다.”²⁵⁾

상해의거 직전까지 한·중 관계는 매우 안 좋은 상태였다. 일제의 이간질에 의한 만보산 사건²⁶⁾ 때문이었다. 게다가 상해 임시정부는 좌우 노선 싸움으로 분열되며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무력해진 임시정부를 다시 소생시키고, 또 유혈 복수극까지 벌이던 한·중 관계를 일거에 회복시킨 일거양득의 쾌거였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은 임시정부가 김구를 중심으로 뭉쳐 장개석의 중국과 한중 군사동맹까지 맺으며 지속적인 항일 투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거국적 3·1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탄생한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이념갈등이 심해지며 이탈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상해 임정을 찾은 독립운동가는 한 때 1000여 명에 달했으나 차츰 줄어 1920년 후반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힘들고 유명 무실한 적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세계 유례가 없이 장기간의 독립투쟁을 거쳐 끝내 카이로선언을 통해 독립을 성취해낸 역사가 이어졌다.

카이로선언에 대한 연구는 선언의 작성 주체에 대한 논전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물론 그 이전부터 카이로선언까지 장기간 이어지는 한국 독립운동의 연속성을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동안 잘 눈여겨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연속성을 복원해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로 선언은 장개석과 루스벨트의 회담으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장개석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또 루스벨트가 장개석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의 주체적 투쟁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 자체가 세계 유례가 없다는 점부터 새롭게 다시 주목받아야 할 것이다. 카이로선언을 마치 강대국이 우리에게 딱 하나 던져준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25) 『장개석일기』 1932.5.26.

26)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 1일 일본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구실로 이용되었다. 당초 길림성 만보산에서 사소한 수로(水路) 문제로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에 일어난 충돌이었었는데 일본특무대가 이 사건을 중국인에 의한 조선인 대량학살 사건으로 침소봉대하였다. 급기야 한·중 양국의 유혈 난투극으로 확대되었다. 재만한인(在滿韓人)들은 중국인에게 주국 재한중국인(在韓中國人)은 한국인에게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는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 하면서 만주 침략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참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일제의 음모로써 1923년의 관동대진재 때 조선인학살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박성수 주해, 『저상일원』, 민속원, 2003, 514~523쪽.

상해 임정의 존립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김구가 결성한 특무공작 기관이 ‘한인애국단’이었다. 김구는 안중근의 전통을 잇는 의열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이 의열투쟁의 정점은 이봉창의 동경의거(1932.1.8.)에 이은 윤봉길의 상해의거(1932.4.29.)였다.²⁷⁾ 상해의거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기사회생했다. 끊겼던 독립자금이 속속 답지했고, 장개석과 김구의 공식 만남으로 한·중 군사동맹이 결성되어 장차 한국 광복군을 이끌 한인 사관들이 중국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는 그로부터 11년 뒤 카이로선언(1943.11.27)에서 조국광복의 출로를 연 계기로 평가된다.²⁸⁾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일제의 이간질로 인해 벌어진 만보산 사건 이후 극도로 악화된 한·중 관계를 극적으로 복원시켰다. 상해를 침공하고 중국인을 능멸하는 일제에게 통렬하게 복수해준 한국에 고마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장개석 총통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이봉창의 동경의거와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우리 민족이 일제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입증했다. 1909년 안중근의 이등박문 저격에 세계가 놀랐고, 1919년 거국적 3·1운동으로 다시 세계가 놀랐으며, 1932년 이봉창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데 이어 윤봉길 의사의 작탄의거가 성공함으로써 세계는 자유와 독립을 향한 한국인의 끈질기고 강렬한 의지를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런 독립투쟁의 연속성이 있었기에 카이로선언에 한국 조항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장개석은 카이로회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종전즉시 독립’ 방침을 적극 대변하는데 그 배경에는 윤봉길의 상해의거에 대한 고마움 이외에 또 하나의 현실적 이유가 있었다. 황태연에 따르면 당시 미군-중국군-광복군 사이에 군사외교적 상호의존 관계가 존재했다. 서로 꼬리를 물고 연결되며 군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장개석이 김구의 요청을 대변하고, 루스 벨트는 장개석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다.

황태연은 미국이 일본 본토 공격을 개시하면서 세 나라 군대의 의존관계가 형성됐다고 본다. 미국 공군의 폭격기는 일본에서 700km 떨어진 항공모함에서 이륙해 일본 본토로 날아가 목표지점을 폭격하고 나면 연료가 다 떨어져서 발진항모로까지 귀향할 수 없었다. 따라서 미군 폭격기 비행사들은 일본 본토 폭격 뒤 가까운 중국 본토로 날아가 중국군 작전지역 안에 낙하해서 중국군의 구출을 받아 미군으로 귀환하는 순환작전을 수행해야 했다. 중국군 작전지역이 넓을수록 미군 조종사의 생존가능성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일본군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중국 본토의 중국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공군이 중국군에 의존적인 상황에서 루스벨트는 장개

27)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기억하면서 이봉창의 동경의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봉창의 동경의거가 없었다면 윤봉길의 상해의거도 힘들었을 수 있다. 윤봉길의 상해의거를 장개석과 중국인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한 계기를 이봉창의 동경의거가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봉창의 동경의거가 일어난 직후 일본 해군이 돌연 상해를 침략했다. 이 사건을 상해사변이라 한다. 상해사변은 이봉창 의거와 무관하지 않다. 상해사변은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가 이봉창 의거를 “韓人 李奉昌 狙擊 日皇 不幸不中” 즉 ‘불행히도 맞지 않았고’고 대서특필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일제가 상해사변을 일으켜 중국인들을 살육하는데도 중국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성수 주해, 『저상일원』, 민속원, 2003, 514~523쪽.

28)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580~635쪽.

석과 중국군에 대한 외교적 지원과 군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당연히 중국군은 미군 조종사의 구출작전을 떠맡는 것에 대한 대가로 미국의 군수 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받아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가급적 넓은 영토를 수복하려고 했다. 상황이 이러했기에 루스벨트는 카이로선언 협상에서도 장개석의 조선독립 조항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²⁹⁾

미국 공군과 중국군의 외존 관계를 유지·확대하는 과정에 한국 광복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군이 미국의 군수 지원과 외교적 지원을 받으며 수복작전을 펴는데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국을 침략한 당시 일본군 가운데에는 강제 징집된 한국인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중국군과 항일 연합작전을 펴는 과정에서 이 한국출신의 일본군에 대해 심리전을 벌여 이들을 탈영하게 함으로써 도처에서 일본군의 전열을 와해시켰다. 중국군 안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병사가 없었다. 중국군의 대일 전쟁에는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과아복군 장병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한국광복군의 규모가 수천 명에 불과했음지라도 중국군은 한국광복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군사적 실익이 있었기에 장개석 총통은 김구 주석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중 군사동맹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 조항까지 넣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중국-미국 사이에 형성된 이 필수불가결한 군사외교적 의존관계 속에서 루스벨트는 장개석의 요구에 응하고 장개석은 김구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이같은 미국-중국-한국 삼국간 의존관계 때문에 카이로회담에서 루스벨트는 한국의 독립을 요청하는 장개석의 의도를 오해하며 이에 불만이 있었을지라도 장개석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받아들이는 정도도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란 표현까지 그대로 수용해 카이로선언에 표기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³⁰⁾

카이로선언에 한국이 두 번씩이나 언급된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더해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결코 흔치 않은 표현까지 그대로 선언문에 들어간 것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장개석이 적극적으로 한국을 대변했음은 이 문구가 그대로 카이로선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유는 대개 평등과 짝을 이루는 말이다. 자유와 평등이 한 묶음으로 쓰이는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유와 독립’은 낯선 표현이지만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애용하던 문구였다. 이 ‘자유와 독립’이 장개석에 의해 그대로 인용되었고 중국측 자료에도 그대로 등장하며, 카이로선언문에도 그 문구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카이로회담 당시 미국-중국-한국 3국간 군사외교적 상호 의존도가 높지않았다면 이런 표현까지 그대로 수용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다.

29)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1~24쪽.

30)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1~24쪽.

흥미로운 점은 이 ‘자유와 독립’이란 표현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종황제가 1909년 3월 15일 내린 ‘서북간도와 부근 각지 인민들에 대한 칙유’에 나온다는 사실이다. 고종은 “오로지 독립 이라야 나라이고, 오로지 자유라야 백성이다”라고 천명하면서 항일 독립전쟁을 고취했다. 고종의 칙유에 앞서 을사늑약 직후 자결한 민영환의 유서에도 이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1905년부터 고종과 근왕세력 사이에서 쓰이기 시작해 점점 확산되면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일종의 암호처럼 쓰였다고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봉창과 윤봉길의 ‘한인에국단 입단선서문’에 쓰인 문구도 바로 이 ‘자유와 독립’이었다. 수많은 임시정부 문서와 독립운동가들의 언설 속에 이 ‘자유와 독립’이란 표현은 수도 없이 등장한다.³¹⁾ 한국 독립운동의 연속성은 카이로선언에서 윤봉길의 상해의거로만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항일 독립투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4. 국제공동관리 문제와 카이로선언

정일화, 유명익의 주장이 쓸데없는 논란만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카이로선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촉발했다. 그동안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실까지도 새삼 다시 주목하게 했다. 카이로선언의 전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카이로회담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이때 이미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해방 직후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나온 신탁통치에 앞서 카이로회담 때 이미 한반도의 신탁통치안이 미국의 주도로 제기되었고, 그것은 최종 선언에 “in due course”라는 애매모호한 구절로 표현되었다.³²⁾

1943년 초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크게 긴장시킨 ‘국제공동관리’ 문제가 바로 신탁통치를 가리켰다. 국제공동관리란 전후 한국을 열강들이 공동 관리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국제신탁통치를 일컫는 말이었다. 상해에서 중경으로 옮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제공동관리를 극력 반대하면서 ‘종전 즉시 독립’을 주장해 관철시켰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1943년 3월 27일 무렵 ‘한국의 신탁통치’를 합의하고 있었다. 영국 외상 앤서니 이든이 미국을 방문하여 루스벨트와 헐 국무장관 등을 만나면서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언론에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international guardship)’가 보도될 정도였다. 당시 한국 국내에는 일제의 철저한 보도 통제로 이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알 수 있었다. 중국 중경에서 ‘中央日報’가 미국 신문 ‘The Chicago Sun’의 런던특파원의 기사를 번역 전재해서 영국 외상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전후 한국에 잠정적으로 ‘국제적 신탁통치’를 하기로 합의되었다고

31) 국사편찬위원회 편찬,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005;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580~635쪽.

32)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2006, 512~538쪽; 한시준,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근현대사연구』 71, 2014;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017, 580~635쪽 참조.

1943년 4월 29일자에 보도하였다.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즉각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4월 29일 그날 국무위원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실행하였다.

- ① 우리 외무부가 중국 외교부에 그 사실의 유무를 질문하고 아울러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
- ② 미·영·러 각국 원수에 반대하는 전보를 보내고, 중국에서는 당국자에 향하여 정식으로 그리고 신문지상에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요구할 것
- ③ 선전부에서는 우리측 간행물과 외국 간행물을 이용하여 반대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반대하는 의사를 널리 알릴 것
- ④ 정치·경제·군사 각 수뇌자를 소집하여 그 진상을 보고하고 대책을 연구할 것³³⁾

1943년 5월 10일에는 한국독립당·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무정부주의자총연맹·대한민국애국부인회·한국청년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이 모여 ‘在中國 韓人自由大會’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전세계 반침략(反侵略) 각국 정부 및 인민에게 보내는 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이 선언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 한국인들은 마땅히 한국의 완전 독립과 자유를 강력히 요구하며 어떠한 국제간섭과 공동관리도 반대한다.
- ㉡ 한국은 충분한 건국의 조건을 갖고 있으며, 전후에 동맹국이 평등·호혜의 대우를 해주면 한국은 즉시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다.
- ㉢ 한국인들에게 독립을 보증해 줌으로써 한국인들의 반일투쟁 분위기를 격려해 주면 동맹국의 승리에 도움을 준다.
- ㉣ 전후 한국의 완전 독립은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³⁴⁾

1943년 중반 무렵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신탁통치 반대 투쟁과 미국이 주도하는 카이로회담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신탁통치 문제를 논의하면서 중국 장개석을 끌어들여 카이로회담을 준비하였다.

루스벨트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열강의 일원으로 대우하여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측도 미군의 병기

33) 『大韓民國臨時政府 公報』 제 78호; 『新韓民報』 1943년 10월 31일자, 『韓國獨立運動史 資料』3, 238쪽.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21쪽에서 재인용.

34) 호준혜, 『韓國獨立運動在中國』 295~296쪽.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22쪽에서 재인용.

보급과 공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회담 준비는 급진전 되었다.³⁵⁾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카이로회담에 장개석이 등장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반탁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하면서 바로 그 반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김구 주석, 조소앙 외무부장, 김규식 선전부장, 홍진 의정원 의장, 이청천 광복군 사령, 김원봉 광복군 부사령 등 임정 요인들이 1943년 7월 26일 오전 장개석 총통과의 직접 면담을 성사시켰다.

이 자리에서 김구 등 임정 요인들은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장래 지위에 대하여 국제공동관리 방식을 채용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중국측은 이에 현혹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지지, 관철해줄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개석은 “영국과 미국측은 이(한국에 대한 국제공동관리) 논조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므로, 장래 쟁집(爭執)이 반드시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내부의 정성 통일과 공작 표현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역쟁(力爭)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중국 입법원장(孫科)·행정원장(干右任)을 만나 국제감호에 관한 문제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그해 말 카이로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는 첩보를 접하고 장개석을 면담한 결과였다.³⁶⁾

장개석이 카이로회담에 참석해 한국의 독립을 위해 역쟁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대한민국임시정부측은 이 소식을 대외적으로 알렸다. 김규식 선전부장은 중경에서 1943년 8월 5일 하와이와 미국 본토의 한국 교포들에게 이 사실을 영어방송으로 알렸다. 이 영어방송은 중국어로도 번역되었다.³⁷⁾

카이로회담에 1개월 앞서서 1943년 10월에는 연합국 외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루스벨트는 외상회담에 참석하는 미 국무장관 헐에게 미국이 제안한 바의 식민지민족들에게 ‘신탁통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연합국 사이에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훈령하였다.³⁸⁾ 이 훈령에 따라 헐은 1943년 10월 29일 영국과 소련 외상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은 영국 단독의 위임통치나 다른 형태의 지배관계를 구상하고 있었으므로 국제공동관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소련 외상 몰로토프는 미국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탁통치 문제는 카이로 회담으로 넘어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카이로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장개석 총통도 한국의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1943년 11월 23일 루스벨트와 장개석이 만났을 때 한국 문제에 관한 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개석이 의외로 한국의 독립보장을 요구하자 루스벨트는 당황했을 수도 있다.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이 대한민국임정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해

35)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23쪽;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1~24쪽 참조.

36)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 『白凡金九全集』 제5권, 252쪽;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12~538쪽; 한시준, 「카이로 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36쪽.

37) 'Radio Broadcast Message to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Hawaii and the Mainland U.S.A 1943. 8.5.', 『白凡金九全集』 제5권, 254~265쪽; '韓國宣傳部長 金奎植 對旅美韓僑廣播 全文, 1943. 8. 5.', 『白凡金九全集』 제5권, 254~265쪽.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에서 재인용.

38) Hull, Cordell, *Memoirs* II, 1943, pp.1304~1305.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28쪽에서 재인용.

‘한국의 종전 즉시 독립’을 주장하자 루스벨트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예전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의심했다고 한다.³⁹⁾

하지만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장개석의 한국 독립 요청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루스벨트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영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독립조항이 카이로선언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과 미국은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한국의 독립을 적극 주장한 장개석의 공로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겠다. 영국은 한국 독립 조항을 삽입할 경우 인도 등 영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에 그 여파가 미칠 것을 우려했다.

루스벨트가 장개석의 요청을 수용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란 문구가 카이로선언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루스벨트의 복안이 함께 포함되었다. 이는 카이로선언에 ‘in due course’라는 모호한 문구로 표현되었다.⁴⁰⁾ 국제공동관리나 신탁통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in due course’라는 다목적의 외교적 언설을 등장시켰다. 이 문구를 사용해 신탁통치로 해석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카이로선언이 공표되자 인도 독립운동의 지도자 네루는 연합국이 한국의 자유 독립을 보장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인도는 무력감과 분노와 참담함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기뻐만 할 수 없었다. ‘한국의 자유와 독립’ 보장에는 환호했지만, ‘in due course’에 대해서는 거세게 비판하였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카이로회담의 결과와 카이로선언에 대한 소련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1943년 11월 28일 바로 테헤란으로 가서 소련의 스탈린과 회담하였다. 영국의 처칠도 참석했다. 테헤란회담의 1943년 12월 28일 제1차 공식회담에서 루스벨트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독립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설명한 후에 “한국은 완전 독립을 획득하기 전에 약 40년간의 훈련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⁴¹⁾ 루스벨트는 ‘40년의 신탁통치’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카이로선언에 나오는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의 내용을 루스벨트는 테헤란에서 ‘40년 신탁통치’로 구체화시켜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탈린은 미군 주둔 하에 40년인가 미군 철수 후에 40년인가를 물은 후, 미군 철수 후임을 희망하면서 ‘40년 신탁통치안’에 찬동하였다.⁴²⁾

39)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580~635쪽 참조

40) 루스벨트와 장개석의 만찬회담에 동석한 홉킨스 특별보좌관이 작성한 기안에서 이 문제의 문구는 당초 “일본의 몰락 후 가장 빠른 가능한 시점에(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로 되어 있었다. 이를 루스벨트가 수정해 만든 표현이 “일본의 몰락 후 적당한 시점에(at the proper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였다. 루스벨트의 수정을 거치며 “가장 빠른(the earliest)”이란 표현이 빠진 것이다. 이것으로써 루스벨트가 종전 후 즉각 독립을 원하는 한국·중국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문학적 재능이 있는 처칠이 루스벨트의 속셈을 읽고 “in due course”로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 최종안이 되었다. 인도를 식민지로 두고 있던 영국의 처칠은 자신들의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한국독립 조항 자체를 넣지 말자는 입장이었다.(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과정’, 『역사비평』 331~336쪽)

41) Truman, Harry S.,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1956, p.316;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32쪽에서 재인용;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11쪽 참조.

42) FRUS: *The Conference at Cairo and Teheran, 1943*, p.869;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32쪽에서 재인용;

테헤란회담에서 미국·영국·소련 3국 수뇌 사이에 합의된 ‘in due course’의 ‘40년 신탁통치’ 합의는 비밀회담이었기 때문에 즉각 세상에 공표되지는 않았다.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하고, 영국은 자국의 이해관계만 따지면서 미국에 보조를 맞추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장개석은 테헤란회담에서의 ‘40년 신탁통치’ 합의에 대해 알았을 수 있었겠지만 더 이상 한국을 위해 진전된 역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40년 신탁통치’를 물리쳐야 할 임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을 거쳐 1943년 12월 1일 한국조항이 포함된 카이로선언이 세계에 공식 발표되었다. 중국의 통신들은 문제의 ‘in due course’를 ‘당연한 순서’라고 번역하여 신문과 라디오 등에서 보도하였다. 하지만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이미 이해 봄부터 미국과 영국 사이에 진행된 ‘한국 신탁통치’ 합의에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in due course’를 ‘당연한 순서’라고 번역했을지라도 그 내용은 ‘신탁통치’임을 즉각 간취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카이로선언을 검토한 후 한국독립 보장은 환영하지만 ‘in due course’에는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김구 주석이 1943년 12월 5일 신문기자 회견을 열어 서 한국측은 “‘in due course’가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이 표현을 반대하며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은 즉시 독립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가 누구든지 역사적인 독립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⁴³⁾

미국의 ‘신한민보’에서도 임시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여 12월 9일자 ‘카이로선언과 한국문제’라는 논설에서 ‘in due course’라는 표현은 피차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은 잠시일망정 ‘어떤 순서’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독립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⁴⁴⁾

일제의 진주만 기습 직후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對日本宣戰聲明書’를 세계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독립투쟁의 흐름을 이어갔기에 카이로선언의 한국 조항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카이로선언이 나온 후에는 ‘in due course’를 둘러싼 반탁 투쟁을 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 광복 이후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이 미국·영국·소련이 합의한 ‘5년 신탁통치’에 맹렬히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은 이미 1943년부터 지속된 반탁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었던 것이었다.⁴⁵⁾ 1943년 카이로선언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전개한 반탁투쟁을 제1차 반탁투쟁으로, 1945년 광복 이후의 반탁투쟁을 제2차 반탁투쟁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차례의 반탁투쟁을 거쳐 대한민국은 자유와 독립을 확보한 나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11쪽 참조.

43) 『新韓民報』 1943년 12월 9일자; ‘카이로회의 발표에 대한 김구씨의 성명’,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239쪽;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32~535쪽에서 재인용.

44) 『新韓民報』 1943년 12월 9일자; ‘카이로선언과 한국문제’,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 23~24쪽;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32~535쪽에서 재인용.

45)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연구』, 535~538쪽;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11~613쪽.

5. 나오는 말

일제의 식민지로 탄압받던 대한민국은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회담을 통해 독립을 보장받았다. 미국·영국·중국 등 연합국 수뇌가 발표한 카이로선언으로 한국은 독립의 문을 열수 있게 되었다. 카이로선언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수많은 피식민지 국가 가운데 유독 한국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언급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자유와 독립’이란 표현까지 그대로 카이로선언에 들어간 것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로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에 대한 관심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시작되었다. 대개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 문구는 장개석에 의해 들어가게 되었고, 논란이 많은 ‘in due course’는 루스벨트와 처칠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상식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정일화와 유영익에 의해 전혀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일화는 2010년 저서에서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이 장개석이 아니라 루스벨트와 그의 보좌관 홉킨스가 주도해 들어가게 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정일화의 주장에 기반해 2013년 유영익은 이승만의 ‘편지 외교’가 루스벨트와 홉킨스에게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결국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다 주장했다. 한국독립의 문을 연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공로자가 장개석, 김구, 윤봉길이 아니라 루스벨트와 홉킨스와 이승만이라는 얘기였다. 카이로선언 70주년을 맞이하는 2013년은 카이로선언을 기념하기보다 오히려 전통적 시각을 뒤바꾸는 과감한 주장에 관심이 더 몰렸었다.

2013년 유영익의 저서가 출간된 직후부터 2014년에 걸쳐 반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완범, 정병준, 한시준은 각기 논문을 발표해 정일화, 유영익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카이로선언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복원했다. 2017년 황태연은 이승만 본인이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공로를 장개석·김구·윤봉길에게 돌리는 문건을 새롭게 발굴해 냈다. 이봉창·윤봉길 등 한민애국단원들의 의거를 기록한 『도왜실기(屠倭實記)』 국역판(1946.6.2.) ‘서문’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밝혀놓았다. “윤 의사의 장거(壯舉)가 있는 후로 중국 관민(官民)의 한인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와 신뢰로 일변해 한중 양국은 자고로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니, 국민정부는 물론이요 장개석 주석부터가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해 음으로 양으로 대한임시정부를 성원해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도 한국해방의 단서가 된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주석이 출현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 원인이 윤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도왜실기』 속 이승만 발언의 발굴은 이승만이 1947년 4월 13일 중국 남경을 방문해 장개석을 만난 자리에서 “장 주석이 카이로회의 시 한국의 독립 주장을 적극 옹호하여준 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예를 표한다”는 청송과 서로 짝을 이루며 2010년 이후 전개된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에 대한 논전을 일단락시켰다고 생각한다.

『도왜실기』의 이승만 발언을 새롭게 찾아내기 전에는 카이로회담에서 루스벨트와 장개석이 만나 실제 한국의 독립을 논의하는 과정을 입증해내야 했다. 이완범, 정병준, 한시준이 그 역할을 맡았다. 대만과 미국에서 출판된 카이로회담 관련 자료들이 집중 분석되었다. 이런 과정에 카이로 선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 2010년 정일화의 주장이 나오기 전에는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사실도 새롭게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 대한 강대국의 신탁통치 논의가 1945년 광복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카이로회담을 전후해서 집중 논의되었다는 사실이다. 카이로선언에 들어간 ‘in due course’는 루스벨트가 주도하고 처칠이 합의한 한국 신탁통치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카이로회담과 테헤란회담은 일련의 연속적 회담으로 봐야 하는데, 테헤란회담의 루스벨트와 스탈린의 논의에서 ‘in due course’의 내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루스벨트의 제안으로 나오는 ‘in due course’의 내용은 ‘40년 신탁통치’였다.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이 들어간 것은 장개석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테헤란회담에는 장개석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in due course’의 내용이 ‘40년 신탁통치’로 구체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한국의 즉시 독립을 위해 역쟁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신탁통치 반대투쟁은 이제 고스란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테헤란회담 직후 카이로선언이 공표되자 중국의 통신들은 문제의 ‘in due course’를 ‘당연한 순서’라고 번역하여 신문과 라디오 등에서 보도하였다.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이미 1943년 봄부터 미국과 영국 사이에 진행된 ‘한국 신탁통치’ 합의에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in due course’를 중국에서 ‘당연한 순서’라고 번역했을지라도 그 내용은 ‘신탁통치’임을 즉각 간취하고 반대투쟁에 나섰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카이로선언의 한국독립 보장은 환영하지만 ‘in due course’에는 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김구 주석이 1943년 12월 5일 신문기자 회견을 열어서 한국측은 “‘in due course’가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이 표현을 반대하며 일본이 패전하면 한국은 즉시 독립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가 누구든지 역사적인 독립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이 들어간 것도 연합국 수뇌들이 그저 한국에 딱 하나 준다는 식으로 던져준 것이 아니었다. 1909년 안중근의 이토 처단, 1919년 거국적 3·1운동, 1932년 이봉창의 동경의거와 윤봉길의 상해의거 등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항일 독립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기에 카이로선언의 한국조항이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카이로선언 이후 신탁통치에 대한 반대투쟁도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된 것이었다. 1943년 전개된 반탁투쟁을 ‘제1차 반탁투쟁’으로, 1945년 광복 이후 전개된 반탁투쟁을 ‘제2차 반탁투쟁’으로 이름붙일 수도 있겠다.

카이로선언 속 한국독립 조항 삽입, 그리고 1·2차 반탁투쟁의 승리를 통한 한국의 광복은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19년 임시정부의 수립은 3·1만세운동이라는 전 국민적 공분의 열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카이로선언 속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란 낱선 표현의 연원을 소급해 올라가면 김구와 독립운동 세력이 애용하던 관용구였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더 올라가 대한제국 고종황제와 민영환 등 근왕세력에게까지 가 닿는다. 한국 독립운동사의 연속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토론 1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에 대하여

김용달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 발표자와 발제문에 대하여

다 아시다시피 한시준 교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전공자이다. 한국광복군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사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사 전반에 이르기까지 광폭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연구자로 이름 높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하자, 여기에 맞서온 대표적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물론 한시준 교수는 '1948년 건국설' 논란 이전부터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한국광복군과 국군' 등 여러 분야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점을 천착해 왔다. 그러던 중 '1948년 건국설' 문제가 대두하자, 그 옹호당도하지 않는 교언영색의 논리와 숨겨진 의도를 파헤치고 '역사와 실제'의 관점과 논리로 그 부당성을 질타한 것이다.

이번 발표도 그간 주장해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문제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관계'를 통해 선명하게 밝히고 있다. 예컨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연호뿐만 아니라 제헌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한다는 내용, 지면상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초기 정부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문제를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논증하여 확립한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에 대하여

발제문에도 잘 드러나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목숨을 건 3.1운동의 과정에서 스스로 '대한의 독립과 대한인의 자주'를 선언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주 꿈과 투쟁이 결집하여 성립한 발생가치를 가진다. 더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전제군주제를 극복하고 민주공화제로 성립한 근대 국가이자 정부이다. 그리고 그 국가와 제도를 유지하고 운영하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광

복을 이룬 역할가치도 크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 5차례 헌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제와 대통령제, 국무령제와 국무위원회 제, 주석제와 주석·부주석제의 지도체제를 경험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의회로 임시의정원을 개원하여 대의제와 법치를 시행하고, 독립운동 정당을 창당하여 여당과 야당의 양당 구조로 임시의정원을 운영하며 의회중심주의의 전통을 만들기도 하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호와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제도, 임시의정원의 전통을 이은 국회의 제도와 운영도, 정당정치도, 그리고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의 데자뷰가 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탄핵 면직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와 법통을 뼈속까지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토론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 - 임시헌장과 헌법 등에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비전”에 대한 토론문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 - 임시헌장과 헌법 등에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적 비전”에 대한 토론문

김현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며칠 후인 4월 11일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공포하여 새로운 독립국가의 이념과 향후 정부의 구성 원칙을 제정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본 정신과 비전을 100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의의와 과제를 검토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현환 교수님의 논문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한 기본 정신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치와 정신은 무엇인지를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잘 정리 하였습니다. 3.1독립선언서가 세계평화 사상을 주창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민주공화주의를 명시한 것은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커다란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자 이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과 헌법 작성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재조명하여 부각시키면서, 앞으로 통일한국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이 논문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당시 3.1운동과 임시헌장의 내용중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평화’ 사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1919년 3.1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 민족의 독립이 배타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 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

오늘 우리의 한국독립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평화와 인류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는 것이라...”

이러한 정신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의 제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계승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여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제1차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일제의 강제병합이 불법적이고 우리 민족의 독립이 필요함을 호소한 것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이 지역에서 평화는 강대국과 식민지배국가 중심으로 현상유지의 성격을 띠며, 일본은 한국의 강제병합과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을 ‘동양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평화구상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며, 3.1운동을 전후한 시기에도 조선의 독립이 동양평화의 필수조건이며 세계평화, 인류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3.1 독립선언서에 평화사상, 평등, 정의 등 사상적 흐름을 잘 언급하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측면에서 평화와 독립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현실적 고민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는 것은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가 직면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기본 정신으로서 ‘민주공화주의’의 이념적 측면 못지 않게 현실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제도와 정치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민주공화제’가 채택된 것은 그동안 조선 왕조의 군주제 체제로는 더 이상 국권을 회복하기 힘들며, 당시 국민들(또는 백성, 시민들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도)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들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와 요청들을 충족시키고 독립된 근대민족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된 것으로 임시헌장 중 다음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임시헌장에서 매우 간결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였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남녀, 귀천 등 신분의 차별이 없으며 모든 국민이 여자를 포함하여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근대적 국민의 형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3·1운동 당시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과 시민 등 각계각층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고,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국민통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정부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고심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대민족국가로 나가는 국간건설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좌, 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하고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국가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 중 경제, 사회개혁에 대한 구상을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조명하고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역사적 가정으로 조소앙 선생이 살아 계셔서 1945년 이후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현재까지 급속한 경제,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어온 것을 보셨다면, 앞으로 21세기 한국의 경제, 사회적 개혁방안에 대해 어떻게 제시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토론 3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과”에 대한 토론문

김종욱 (동국대 SSK 패치워크문명연구팀 연구교수)

“카이로선언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과”에 대한 토론문

김종욱 (동국대 SSK 패치워크문명연구팀 연구교수)

‘3·1 대한독립만세운동’과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옛날부터 명명되었던 우리의 다른 이름 ‘한(韓)’이 구한말의 위기 속에서 더 큰 자주독립된 큰 ‘한’ 나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대한’으로 호명되었고, 영·정조 때부터 계몽군주에 의해 규정된 “백성을 위해 임금이 있는 것이지, 임금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¹⁾라는 ‘백성의 나라’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백년은 명실상부한 ‘국민의 나라(民國)’로 가는 또 다른 대장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차원에서 이 발표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비밀코드 ①’ 카이로 선언에 왜 유일하게 한국의 독립만 명기된 것일까? ‘비밀코드 ②’ 카이로 선언에 명시된 ‘자유와 독립’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비밀코드 ③’ 국제신탁통치를 의미했던 ‘적절한 시점(in due course)’을 없애고 즉각적인 독립을 쟁취하도록 만든 것은 어떤 힘이었나? 이 의문들을 풀어주고 있다. 비밀코드를 풀어가는 단서로서, ①은 광주학생의거를 거쳐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②는 고종과 의병(별입시), 그리고 임시정부의 전결한 항일전쟁의 역사로, ③은 국내외 대한국민의 불굴의 투쟁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우리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오독과 왜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양상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양상은 두 가지인데, 첫째, 근대화론으로 포장된 친일역사관과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무비판적 긍정이며, 둘째, 이념적 프리즘에 입각한 이승만 前대통령 ‘국부(國父) 만들기’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확인한 최초의 국제문서는 ‘카이로선언’이고, 이 선언에 한국의 ‘자유와 독립’이 명시된 것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이었으며 우리의 항일투쟁에 감동한 장개석의 임시정부 지원과 한중군사동맹, 그리고 카이로회담에서의 장개석의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역할을 폄하하고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의 참모 홉킨스의 역할을 과대평가 또는 미화하는 해석이 등장하면서, 논쟁 아닌 논쟁이 전개되었다. 동시에 이승만 前대통령을 국부로 1948년을 건국절로 만들려는 의도는 이승만의 당대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라는 역사 미화와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한 독립투사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역사왜곡으로 나타났다.

1) 爲民有君 不以爲君有民也, 『承政院日記』 영조31(1755)년 1월 6일.

또한 이승만 前대통령 스스로 카이로선언에 한국의 독립이 명기된 것은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념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하니 자신들이 추앙한 ‘국부’의 역사해석까지 왜곡하게 된다. 또한 카이로선언에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다 보니 40년 ‘신탁통치안’을 제시한 잘못된 판단마저도 눈감아주게 된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일부 역사학자들이 친일역사관과 미국 옹호 역사평가, 그리고 이승만 국부 등을 주장하며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사태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고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둘째, ‘자유와 독립’이란 용어의 출처로 고종의 칙유와 민영환의 유서, 그리고 별입시와 의병장들을 언급했는데 항일독립 전사(全史)에서 고종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특정해서 카이로선언 내용에 고종은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그리고 몇 가지 언급할 것은 우선 이승만의 편지와 관련 조미수호통상조약 위반을 편지에 적시했다는 것은 과거 고종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은 1904년 8월 4일 종신형의 옥고를 치르고 있던 이승만을 대사령으로 석방했는데, 이것은 민영환과 한규설의 주청을 받아들여 이승만을 주미공사로 임명하고 조미수호조약 제1조 ‘거중조정’ 의무를 근거로 극비 외교임무의 특사밀지를 주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외교를 시도하려 했다.

둘째, 1905년 이후 의병의 거병은 고종의 지시를 받은 별입시들의 밀지 전달을 통해 일어났고, 1907년 이래 연해주·만주 등에서 활동한 의병들은 고종의 자금을 받아 활동했다. 이것은 독립전쟁의 핵심 화두인 ‘자유와 독립’이 고종과 의병들의 합의된 전략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북간도와 부근 각지 인민들에 대한 밀유(1909.03.15.)’는 카이로선언의 한국 독립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며, 고종과 의병의 항일 전쟁이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이어져 김구 선생과 장개석의 노력과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구한 항일전쟁의 역사적 연속성과 불굴의 투쟁이 국제문서에 한국의 독립 명기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우리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1948년 건국절 논쟁이 헌법에 적시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다는 역사논쟁을 일으켰듯이, 3·1운동을 촉발한 것은 무엇이며, 단지 3·1운동을 공화정 정체의 최초 시작으로 협소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파리강화회의의 밀사파견과 북경망명정부 수립을 추진하던 고종이 일제에 의해 독살당하고, 일제의 압제와 고종의 독살에 대한 분노로 거족적인 3·1운동을 전개했으며, 3·1운동은 상해임시정부 수립으로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졌고,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터져 나와 임시정부의 강화와 광복군의 창설로 나타났으며, 카이로선언의 한국 독립으로 결실 맺었다. 그리고 드디어 1945년 광복이 찾아왔다. 이런 차원에서 3·1운동을 공화정체의 탄생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축소된 해석이라 생각된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3·1운동을 단지 공화정체의 시작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